

II. 6 · 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1. 6 · 10만세운동

2. 신간회운동

II.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1. 6·10만세운동

1926년 隆熙皇帝(純宗) 昇遐를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3·1운동 때와 같이 전국적 만세운동을 일으키려 한 운동이었다. 때문에 ‘제2의 만세운동’이라고도 하지만, 이들 두 운동은 배경이나 주체·이념·규모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컨대 3·1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후 人道主義가 부상하며 세계 개조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¹⁾ 6·10만세운동은 제국주의적 지배질서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3·1운동의 계획주체가 종교지도자 같은 자유주의자였다면, 6·10만세운동은 자유주의자와 더불어 사회주의자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3·1운동 때의 지도이념이 자유주의 사상이었다면, 6·10만세운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사상이 민족독립에 귀결되면서 결합된 지향을 보였다.

6·10만세운동 직후 安昌浩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6·10만세운동보고회에서 6·10만세운동이 “전연 자각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全民衆의 중심이 될 통일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²⁾ 6·10만세운동에서 드러난 민족통일전선의 이념과 노선을 높이 평가한 바 있었다. 또한 조선공산당은 <조선공산당선언>에서 6·10만세운동을 민족혁명유일전선의 첫 기초

1) 趙東杰, <3·1運動의 理念과 思想—독립선언서와 선언자의 비교 분석—> (《韓國獨立運動의 成立과 獨立運動史 研究》, 지식산업사, 1989).

——, <3·1운동 전후의 民族知性> (《韓國民族運動의 발전과 獨立運動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3).

2)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601~602쪽. 당시 상해에서는 독립신문사와 혁명청년사 등의 발기로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로³⁾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즉 6·10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발전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주의사상의 유입과 더불어 꾸준히 제기된 민족통일전선의 이념과 노선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 융희황제의 승하와 6·10만세운동의 태동

1926년 4월 25일 융희황제가 승하하자 望哭과 奉悼를 통한 애도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여기에 宋學先의 金虎門의거, 그리고 국외 독립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들로⁴⁾ 민족적 항일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금호문의거는 융희황제의 승하로 전국에 망국이 물결치던 때인 4월 28일 오후 1시 10분 경 금호문 앞에서 송학선이란 청년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을 처단하기 위해 의거를 단행한 것이었다. 평소 安重根 의사를 흠모하였던⁵⁾ 시골청년 송학선은 수년 전부터 조선총독을 처단하기로 뜻을 세워오다가, 융희황제 승하소식을 접하고 조선총독 사이토의 처단을 결행하기로 결심하였다. 4월 28일 조문을 위해 사이토 총독이 온다는 정보를 접한 송학선은 금호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京城府協議會 의원 사토(佐藤虎次郎)를 사이토로 잘못 알고 의거를 결행하였다. 당초 목표인 사이토 총독 처단에는 빗나갔지만, 망국의 통한에 젖어 있던 한국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통쾌한 쾌거였다. 평범한 농촌청년인 그가 그것도 단독으로 결행한 의거라는 점에서 충격과 감동은 배가되어 갔다. 그가 “나는 主義者도 사상이

3) 《불꽃》 제7호, 1926년 9월 1일. 이들은 6·10만세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위하여 適宜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조직적 희생적으로 진행한 것이 확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융희황제 國喪 동안인 1926년 5월 경 국내의 각 신문들에서는 正義府·新民府 등 만주독립군 단체가 국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5) 宋相燾, 《騎麗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71), 374~377쪽. 그가 안중근 의사를 흠모한 것은 1923년 경 우연히 日本人 商店에 걸려진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서였다. 이때 송학선은 伊藤博文을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것을 목격하고 조선총독 齋藤實을 처단하기로 결심을 굳혀 갔다고 한다.

도 아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 다만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놈들은 백번 죽여 마땅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총독을 못 죽인 것이 저승에 가서도 한이겠다”고⁶⁾ 한 범정진술은 당시 식민지 통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율회황제 승하 직후 결행된 송학선의 의거는 항일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갔고, 3·1운동 때와 같은 기운이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었다.

일제는 3·1운동 때와 같은 분위기가 다시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망곡과 奉悼式을 철저히 규제하며 官의 주도 아래 거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때문에 망곡과 봉도를 강행하는 일반 민중 및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일제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 동안에 일제 경찰에 주의·설유·검속당한 사람이 3만 명에 달하였다는⁷⁾ 사실은 그러한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2) 해외의 6·10만세운동 계획과 추진

6·10만세운동의 계획은 上海의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임시상해부는 당초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에 즈음하여 대규모의 대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국내 대중단체의 대표적인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이 1924년에 창립된 이후 집회금지를 당하였다가 1926년에 이르러 집회가 제한적이거나 허용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 형식이나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메이데이기념식 행사를 준비해 갔다. 그리하여 4월 24일에는 정우회·전진회·조선노동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의 4단체 합동으로 메이데이기념식을 거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최되는 것이었지만, 임시상해부와 조선공산당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임시상해부의 金丹治는 중국 안동현과 국내로 파견되어 대중시위 계획을

6) 《동아일보》, 1926년 5월 23일.

7) 《조선일보》, 1926년 5월 5일.

추진해 갔다.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⁸⁾ 신의주에 잠입하여 국내 거사를 준비하던 중 김단야는 융희황제의 승하소식을 접하였고, 애도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물결쳐 가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가 융희황제의 승하로 인하여 메이데이기념행사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메이데이기념일의 대중시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단야 등은 당초의 대중시위 계획을 만세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 갔다. 즉 처음에는 계급적 반제시위로 추진되던 메이데이기념시위가 4월 25일 융희황제 승하와 함께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다 민족적 운동의 형태인 만세운동쪽으로 방향을 조정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때 이들은 융희황제의 國葬을 사회주의운동이 대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민족운동의 선봉’에 선다는 비난이 있더라도 만세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의 계획과 더불어 제반의 준비도 추진되어 갔다. 임시상해부는 만세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격문의 인쇄를 담당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단야는 상해로 돌아와 曹奉岩·金燦 등과 함께 〈服喪 慟哭하는 民衆에 檄함〉이란 격문을 작성한 뒤 崔昌植이 경영하는 上海 삼일인쇄소에서 5,000장 정도를 인쇄하여 서울로 보냈다.¹⁰⁾ 이 격문은 안동에 5월 28일 경 도착되었고, 예정대로 三成運送店에서 서울로 부쳐졌다.¹¹⁾ 그러나 서울역에 도착된 격문은 국내

8) 이때 김단야는 金恒俊과 이봉수 등을 만나서 운동자금을 건네주었다(〈제2차 조선공산당검거보고철〉, 金俊葉·金昌順 編,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109쪽).

9) 시위형태에서 독립만세운동의 특징은 ‘절대 독립’을 뚜렷이 표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립만세운동은 시위의 강도를 떠나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식민지통치를 전면 부정하는 강력한 저항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찬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李王逝去와 國葬은 민중운동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령을 발하고 운동자금은 후일 보내기로 하였는데 성명은 잊었으나 모학생에게 천백여 원을 탁송하였다. 또 〈望哭하는 民衆에게 檄함〉이라는 제목의 격문 수천 장을 상해 3·1인쇄소 崔昌植 방에서 김단야의 원고에 기초하여 인쇄하고, 기타 격문의 원고와 함께 권오설에게 보냈다”(〈金洛俊調書〉, 金俊葉·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자료편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405~406쪽).

11) 〈2차조선공산당에심결정서〉(김영진, 《朝鮮共產黨事件真相》), 33~34쪽. 이때 운송의 책임을 맡았던 金恒俊은 격문을 담은 상자에 써서 서울로 보낸 뒤 6월

에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발각되는 것과 함께 국내의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압수되고 말았다.¹²⁾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선언서의 인쇄가 임시의정원 의장 최창식이 경영하던 삼일인쇄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삼일인쇄소는 임시정부의 기관지 《獨立新聞》을 발행하던 곳이기도 했다. 삼일인쇄소의 최창식과 임시상해부의 여운형·김단야 등은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이였다. 이 무렵 임시정부가 최창식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6·10만세운동의 계획은 임시정부 인사들과도 연대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병인의용대가 융희황제의 因山에 맞추어 국내 의거를 계획·추진해 갔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26년 1월 상해에서 결성된 병인의용대는 임시정부 경무국장 羅昌憲 등의 주도로 일제 기관의 파괴·일제 밀정 및 주구배 차단 등을 주요 활동 지침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했으며, 국내 및 만주의 독립군단체와도 연계하면서 국내에서의 의거를 도모하고 있었다.¹³⁾ 병인의용대가 국내에서의 의열투쟁을 계획한 것은 융희황제 승하 직후인 4월 말부터였다. 이들은 5월 9일 최고간부회의를 통해 융희황제 국장을 기해 거사를 단행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다. 국내의 천도교와 연결된¹⁴⁾ 이들의 목표는 총독과 같은 일본 대관의 처단이었다.¹⁵⁾ 그리하여 金光善(金光孫)·李英全(李德三)·高俊澤·金碩龍 등 대원 4명이 국내로 잠입하기 위해 6월 1일 중국인으로 변장하고 권총 2정과 폭탄 2개, 다수의 격문을 휴대하고 중국 상선 순천호에 승

3일에 서울에와 貨物引換證을 《조선일보》의 홍덕유에게 건네주었고, 홍덕유는 다시 권오설에게 건네주었다.

12) 《동아일보》, 1926년 6월 8일.

13) 1926년 5월 경 나창현·이유필 등이 간도지역에서 파견된 독립군 요원 10여 명과 상해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음이 일제 정보망에 포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병인의용대가 만주 독립군과도 연계되어 투쟁 계획을 세웠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朝鮮總督府 警務局, 《上海情報》 1926년 5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이하 ‘아연’)자료 문서번호 33, 213쪽).

14) 장석홍,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국사편찬위원회》, 2000), 309쪽.

15) 朝鮮總督府 警務局, 《上海情報》 1926년 5월 20일(고대 아연자료 문서번호 33), 256~257쪽.

선했다가, 황포탄 하류에서 일제의 수상경찰에 잡혀 거사계획이 좌절되고 말았다.¹⁶⁾

3) 국내의 6·10만세운동 추진과 발각

6·10만세운동은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학생층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깊은 연대 아래 계획·추진되었던 점에서 독립운동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독립을 위해 3·1운동이 종교이념을 초월하였다면, 정치이념을 초월한 6·10만세운동은 1920년대 중반 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는 계획 초기부터 천도교를 가장 유력한 제휴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투쟁지도부는 6·10만세운동의 거사를 위해 처음부터 천도교 세력과 연대를 모색해 갔다. 이 무렵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파와의 연결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權五高과 朴來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6·10만세운동에서 천도교 구파의 지도자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지원하는 전술을 취하였다. 3·1운동을 주도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천도교는 일제의 분열책으로 창건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신·구파의 내부분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같은 처지에서 구파의 인사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하게 될 경우 또 다시 옥고를 치를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구파세력은 붕괴되고 말 형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이들 지도자들은 일선에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청년세력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실은 절대 비밀리에 붙여졌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공산당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조선공산당이 6·10만세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공산청년회를 중심으로 진행시켜 갔던 것은 조직보전을 위한 방책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1925년 11월에 1차조선공산당이 발각되어 크게 타격을 입은 조선공산당은 겨우 당의 진용을 수습한 상황이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1973), 610~612쪽.

《동아일보》, 1926년 6월 4·19일.

었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에서는 당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세시위의 추진을 당 중앙기관과 분리된 형식으로 취하기로 결정하는¹⁷⁾ 등 당의 보전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권오설의 주장에 따라 ‘6·10투쟁특별위원회’라는 별도의 투쟁지도부를 결성한 것은 그같은 뜻에서였다.¹⁸⁾ 이것은 공식 명칭은 아니었고 잠정적인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의 투쟁지도부는 러시아의 10월혁명이 3인의 지도위원회에서 추진되었던 것과 같이 권오설의¹⁹⁾ 책임하에 李智鐸·박민영 3인으로 구성하였다.²⁰⁾ 이들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와 간부들이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6·10만세운동의 투쟁지도부는 고려공산청년회에서 주도해 간 것이었다.

이때 지도부는 세 가지의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첫째는 사회주의·민족주의·종교계·청년계의 혁명분자를 망라하여 ‘大韓獨立黨’을 조직할 것, 둘째는 대한독립당은 우선 6월 10일을 기하여 대시위운동을 실행할 것, 셋째는 시위운동의 방법은 장례행렬이 지나는 연도에 시위대를 분산 배치하였다가 격고문 및 전단을 살포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할 것 등이었다.²¹⁾ 이에 따라 6·10만세운동의 주체들은 혁명세력의 결집에 힘을 기울여 나갔고, 그 가운데 천도교 구파는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다.

6·10만세운동에서 천도교측의 주요 임무는 격문 인쇄 및 배포와 지방 조

17) 조두원, <6·10운동과 조선공산당> (《청년해방일보》, 1946년 6월 9일).

18) 全錫淡, <六十運動小史> (《週報 民主主義》 22, 1947년 7월), 11쪽.

19) 권오설은 1897년 경북 안동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漢文私塾에서 한문을 익혔고, 11세 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에 대구고보와 1918년에 중앙고보를 다녔지만 경제사정으로 학교를 마치는 못하였다. 이후 그는 전라남도 도청에 잠시 근무했지만, 3·1운동으로 퇴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운동에 투신하였다. 고향에서 佳谷農民組합을 조직하기도 했으며 안동청년회와 풍산소작인조합·풍산청년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이 무렵 그는 李準泰와 동지적 관계를 맺게되면서 사회주의사상에 접근해 갔다. 그리고 1924년 풍산소작인회 대표의 자격으로 조선노동총동맹 창립총회에 참석 후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사상단체 火曜會에 가입하였으며 1925년 고려공산청년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차조선공산당 발각 후 그는 2차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로 활동하다가 6·10만세운동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에 의해 1930년 4월 17일에 옥중 순국했다(權大雄, <權五高의 生涯와 活動>, 《安東文化研究》 6, 1992).

20) 조두원, <6·10운동과 조선공산당> (《청년해방일보》, 1946년 6월 9일).

21)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9(1976), 425쪽.

직의 활용을 통한 지방만세운동의 확산에 있었다.²²⁾ 비록 천도교 구파의 세력이 신파에 비해 열세였고, 또 천도교청년동맹이 생긴 지 얼마 안됐다고는 하나 천도교의 조직기반은 전국적이었으며 세력규모도 민족세력 중에서는 여전히 유력한 것이었다.²³⁾

박래원은 천도교청년동맹과 인쇄직공조합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동지규합에 나서 손재기·백명천·양재식·민창식·이용재 등을 포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오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인쇄에 필요한 소형 인쇄기 2대와 용지 20장, 활자, 기타 필수품을 구입하였다. 이들이 인쇄에 착수한 것은 5월 15일 경 권오설에게서 격고문과 전단의 원고를 받은 후인 5월 17·18일부터였다.²⁴⁾ 처음에 이들은 안국동 36번지 백명천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문을 인쇄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웃에서 위조지폐를 제조한다는 소문이 돌자 5월 27일 경에 인쇄기를 몰래 민창식의 집으로 옮겨 5월 31일까지 약 5만 장의 격문 인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인쇄가 완료된 격문은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 석유상자 등에 나누어 넣은 뒤 경운동 88번지 천도교당 안에 있는 손재기의 집에 숨겨 두었다.

박래원과 관계자들은 격문의 지방배포와 지방조직과의 연락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세워놓고 있었다. 우선 격문은 지방의 조선일보지사·개벽지사·소비자조합·천도교 교구·기타 청년단체 등에 보내기로 하고 발송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²⁵⁾

22) <박래원신문조서(1회, 1926. 10. 14)>(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325~328쪽.

<권오설신문조서(3회, 1926. 10. 11)>(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141~145쪽. 이때 박래원은 권오설로부터 600원의 자금을 받았다.

23) 박래원은 당시 천도교가 동원시킬 수 있는 군중의 수가 20만 정도였다고 회고하였다(《조선인민보》, 1926년 6월 10일, <박래원의 증언>).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조사 기록에는 구파의 세력이 1만도 채 안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4) <박래원 신문조서(1회)>(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325~326쪽.

25) <박래원 신문조서(1회)>(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340~343쪽. 박래원, <6·10만세운동 회상>(《신인간》통권 337호, 1976), 15쪽. 이들 두 기록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양쪽에서 지명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표시했다.

전라남도(광주·목포·순천·광양), 전라북도(전주·군산·정읍·남원), 충청남도(공주·대진·예산·홍성·천안), 충청북도(청주·충주·음성), 경상남도(진주·마산·부산·하동·고성), 경상북도(대구·안동·상주·영천·포항), 경기도(인천·개성·강화·의정부·수원), 황해도(황주·해주·사리원·재령·신천), 평안남도(평양·진남포·안주), 평안북도(신의주·선천·철산·정주), 함경남도(함흥·정평·홍원·영흥·원산·북청), 함경북도(청진·나남·온성·웅기)

격문의 송달 방법은 《開闢》·《新民》·《新女性》 등의 잡지 사이에 넣어 발송할 계획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추동하기 위해 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을 호남선·경부선·경원선·경의선 방면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박래원은 호남선과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인 대전, 민창식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인 사리원이나 경원선 방면의 중심지인 원산을 근거로 활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²⁶⁾ 이 과정에서 천도교 청년동맹원을 통한 지방 확산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서울 시가지에는 6월 8일 밤을 기해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해의 김단야로부터 6월 초까지 오기로 한 격문과 자금이 전달되지 않아 출발이 지연되었고, 박래원은 천도교의 지도인사인 권동진에게 급히 자금요청을 하여 1만원 가량의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기다리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발각되고 말았다.

6·10만세운동의 계획이 한참 추진 중이던 1926년 5월 경, 일제는 중국인 위조지폐범이 일본 오사카에서 서울로 잠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범인색출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26년 6월 4일 도림동 50번지 李東圭의 집을 수색하던 중 화장실에서 위조지폐와 함께 대한독립당 명의로 된 격고문 1장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사망을 좁혀간 일제는 결국 이것이 이상우를 통해 안정식에게 건네 준 것이 다시 이동규에게 건네진 연결통로를 밝혀내고 이상우의 처인 고우섭이 근무하는 개벽사를 급습하여 격고문 상자를 찾아냈던 것이다.²⁷⁾

〈박래원 신문조서(1회)〉(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347~348쪽에 기록된 지역은 박래원과 권오설이 함께 지정한 것이다.

26) 〈박래원 신문조서(1회)〉(고려대 아연 소장자료, 문서번호 100호), 338~340쪽.

그리하여 천도교 인사들은 박래원을 비롯하여 천도교당 현장에서 50여 명이 체포된 데 이어 발각 당일에만 천도교 간부와 개벽사 인사 80여 명이 체포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4) 학생들의 만세시위 추진

6·10만세운동에는 학생들도 추진주체로 참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집단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세칭 통동계를 들 수 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 9월 서울에서 창립되어 1920년대 후반 서울 지역 학생운동을 선도한 단체였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창립 초기 70~8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6·10만세운동 무렵에는 500여 명에 달할 만큼 세력을 키워나갔다.²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창립 초기 일정하게 조선공산당 내지 고려공산청년회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6·10만세운동 추진방침 및 전술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에 일정하게 관철되었으며, 특히 6·10만세운동을 책임맡았던 권오설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²⁹⁾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추진한 6·10만세운동의 준비과정은 대략 4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제1단계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학생 80여 명이 세검정으로 야유회를 가던 도중 융희황제의 승하사실을 알게 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제2단계는 李柄立이 권오설을 통하여 만세운동의 계획을 전달받은 5월 3일 경부터 5월 19일까지, 제3단계는 각급 학교 학생 40여 명이 朴河均의 하숙에 모여 만세운동 계획을 협의했던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리고 제4단계는 조선공산당이 발각되는 상황에서 만세운동의 새로운 전환점

27) 지중세 역편, 《조선사상범 검거실화집》(돌베개, 1984), 28쪽.

28) 6·10만세운동 당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이하 ‘조과연’)의 사무소는 건지동 98번지에 위치하고, 회원은 509명이었다(一記者, 〈在京學生團體의 內面〉, 《開闢》 72, 1926, 50쪽).

29) 장석홍,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참조.

을 맞이한 6월 6일 경에서 의거 당일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융희황제의 승하사실을 접하고, 3·1운동 때와 같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식은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각급 학생 대표들이 모일 것을 다짐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2단계부터이다. 이병립이 권오설로부터 6·10만세운동의 계획과 투쟁지침을 전해 들은 것은 5월 3일이었다. 조선공산당에서 6·10만세운동의 결행을 결정한 다음날에 조선공산당의 방침이 이병립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다. 이때 권오설은 6·10만세운동 계획과 투쟁지침을 알리는 한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임무와 역할을 지시하였다.³⁰⁾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주요 임무는 인산 당일 가두행렬에서의 만세선창과 격문살포였다. 당시 인산행렬의 가두에는 학생들이 배열될 예정이었고, 또한 3·1운동 때 학생들의 활약을 경험한 터였으므로 6·10만세운동의 선봉 역할을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병립·李先鎬·李天鎭·趙斗元 등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들은 수차에 걸쳐 학생동원 및 시위방법 등을 숙의하면서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워 나갔다.³¹⁾ 즉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 사이에서 고조되던 항일적 분위기가 조선공산당에서 계획한 만세시위의 지침과 접맥되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만세운동이 구체화되어 갔던 것이다.

제3단계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를 중심한 만세운동의 계획이 학생계로 파급되면서, 의거 준비가 성숙되어간 과정이다. 5월 20일에 각급 학교 학생 대표 40여 명이 가졌던 모임에서는 의거의 투쟁방법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朴斗鍾·이천진·박하균·이병립·이선희 등 5명을 준비책임자로 선임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들이었다. 이때 박하균·박두중 등은 자금 조달의 책임을 맡았고³²⁾, 이

30) 朝鮮總督府 警務局, 《(극비문서)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 392~393쪽.

31) 이천진, 〈육십운동의 회고〉(상), (《독립신보》, 1946년 6월 10일).

32) 정세현, 〈6·10만세운동〉(《한국근대사론》 2, 지식산업사, 1979), 190쪽. 박두중과 박하균은 5월 하순에 귀향하여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선호와 이병립 등은 학생 포섭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³³⁾

그리고 세칭 ‘통동계’ 학생들과의 연결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즉 5월 20일 이후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학생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통동계’의 계획과 활동을 접하게 되면서³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두 계열의 학생계는 비밀유지를 위해 거사를 각기 추진키로 하되, 거사 당일의 의거장소를 안배하는 등 연대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제4단계는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이 발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만세운동을 추진해 간 과정이다. 조선공산당이 발각된 것은 6월 6일이었다. 이전까지 만세운동의 계획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거사 당일에 필요한 격문·선전문 등을 조선공산당에서 작성·인쇄한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러나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측에서의 계획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준비를 추진시켜 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태극기 200장과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30장을 제작하는 한편 이병립이 격문을 초안하여³⁶⁾ 인쇄에 들어갔다. 인쇄기의 구입은 《시대일보》 배달원 김낙환이 맡아 명함인쇄기 1대를 구하였고, 김규봉이 종이를 구입하여 5명의 학생이 사직동 이석훈의 집에서 주야로 6월 9일까지 격문 1만여 장을 인쇄할 수 있었다.³⁷⁾ 그리고 6월 9일부터는 학생들에게 격문을 배포하면서 인산 당

33) <6·10만세운동 판결문>(6·10만세기념사업회 편, 《6·10독립만세운동》), 213~215쪽.

34) 박용규 등 ‘통동계’의 학생들은 5월 16일에 민족적 의거를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동지들을 포섭하여 23일에는 각급 학생 50여 명과 함께 의거의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투쟁방침을 정한 뒤 26일부터 5일 동안 격문을 인쇄하고, 6월 8일 전국 각처의 학교를 대상으로 격문을 발송하였다 (〈6·10만세운동 판결문〉, 6·10만세기념사업회 편, 위의 책, 214~215쪽). 《동아일보》, 1927년 3월 26일.

35)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만세운동 때 사용할 격문의 작성·인쇄 작업이 6월 8일 이전까지는 보이는 않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36)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격문의 내용이 “이천만 동포여! 원수를 구축하라. 피의 값은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와 같이 간단한 것은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37) <6·10만세운동판결문>(6·10만세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212~213쪽.

일의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다. 이때 격문배포는 주로 이선호와 박두중·박하균 등이 맡아 우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선호는 중앙고보생 권태성·유면희와 연희전문생 권오상·홍명식·박한복에게 태극기 수장과 격문을 배포하였으며, 박두중은 김낙환에게 격문 300장을, 조선기독교청년회 영어과 학생 유원식에게 200장을, 근화여학교 학생 김정자에게 100장과 태극기 1장을 교부하였다. 이천진은 중등고보생 김인오에게 격문 600장과 태극기 2장을 전달하였다. 박하균은 연희전문학교생 김규봉에게 격문 50장, 이석훈에게 600장, 韓一淸에게 30장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유면희는 중앙고보 학생인 임종업·이현상에게 각각 50장을 나누어 주고 거사에 만전을 기하였다.³⁸⁾ 이때 이들은 인산 당일에 혼란할 것에 대비하여 호각의 신호에 의해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인산 당일의 의거에 맞추어 급박하게 준비를 진행시켜, 당초의 계획대로 의거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칭 통동계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는 별도의 고보생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로서, 중심인물은 5~6명 정도에 불과한 규모였다. 뚜렷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세력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을 거사를 계획했던 곳인 通洞의 이름을 따서 ‘통동계’라³⁹⁾ 가리켜 왔다.

이들의 동지적 결합은 같은 학교의 학우 내지는 하숙집 친우관계로 서로 얽혀져 있었다. 융희황제가 독살되었다는 풍설과 함께⁴⁰⁾ 4월 28일 송학선의 금호문의거가 일어나면서 통동계 학생들은 항일투쟁에 대한 결심을 굳혀 갔고, 그것을 민족적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⁴¹⁾ 3·1운동 때처럼 전국적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의지를 모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무렵의 상황이 3·1운동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던 점이다. 국제정세의 객관적 조건이나 민족운동세력의 주관적 조건이 크게 변

38) <6·10만세운동 판결문>(6·10만세기념사업회 편, 위의 책) 참조.

39) 이들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이 조직기반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나 출신이 동일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들의 명칭을 ‘통동계’로 사용하기로 한다.

40) 朴龍圭, 〈因山에 모여든 ‘民族의 痛憤’〉(《신동아》1969년 9월호), 302쪽.

41) 위와 같음.

화되어 있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민족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내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분열정책에 의해 개량국면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국제정세나 국외세력의 변화보다는 국내 민족세력의 개량화가 직접적이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였다. 崔麟이 그랬던 것처럼 3·1운동 때의 지도세력들 대부분이 일제와 타협적 경향을 보이며 민족운동의 범주에서 이탈해 가고 있었다. 식민지 분열정책에 편승한 자치론의 대두는 이 무렵의 국내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개량국면은 이들로 하여금 기성세대와 연대 또는 합류를 포기한 채, 독자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⁴²⁾

이들의 거사 추진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제1단계는 거사계획의 구상과 동지포섭(5. 16~5. 25), 제2단계는 만세운동을 위한 격문 작성과 인쇄(5. 26~5. 31), 제3단계는 선언문 배포와 인산 당일의 거사(6. 1~6. 10) 등으로 구분해 살필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이들이 因山日을 전후하여 거사를 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구체적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우선 이들은 서울의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지규합에 나섰다. 이때 지역을 둘로 구분하여, 李東煥이 제일고보와 동쪽방면의 학교를 맡고, 金載文·黃廷煥은 보성고보와 서쪽방면의 학교를 맡기로 했다.⁴³⁾ 이들은 일주일만에 5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할 수 있었고,⁴⁴⁾ 5월 23일에는 성북구 삼선평에서 축구시합을 위장하고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때 투쟁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기관과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충정로(本町) 일대의 폭파와 같은 보다 강력한 투쟁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⁵⁾ 그러나 이같은 투쟁방법은 일동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해산 후 통동계

42) 운동의 주체였던 박용규는 당시의 상황을 “1920년대 후반의 민족주의운동은 현저히 저하된 편이었으며 앞장 서서 친일을 자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발벗고 나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지도 못하는 어리벙벙한 풍조가 상당히 짙은 편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위와 같음).

43) 李東煥 述懷, 〈두갈래의 抗日舉事〉(《경향신문》, 1963년 6월 10일).

44) 이때 참석한 50여 명의 학생은 단언하기 어려우나 통동계 학생들과 동향의 친구 및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5) 李東煥, 〈6·10萬歲事件의 真相〉(《中央》, 1974년 10월호), 268~269쪽.

학생 5명은 24·25일 이틀 동안 회의를 거듭하여 건물폭파와 같은 과격한 투쟁방법은 정세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융희황제 인산일을 기해 3·1운동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제2단계에서는 앞서의 결의에 따라 거사에 필요한 격문을 작성하고 인쇄작업에 집중하였다. 5월 26일에 황정환·김재문이 낙원동 255번지 김성기로부터 등사판을 빌려왔고, 이동환은 용지를 구해 왔다. 거사에 필요한 자금은 고향에서 보내오는 생활비의 일부와 외투·책을 팔아 충당하기로 하였다.⁴⁶⁾ 5월 28일 이동환·김재문이 인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고, 5월 29일 통동 71번지 김재문의 하숙에서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격문을 작성하였다.⁴⁷⁾ 작성된 격문은 5월 31일까지 박용규의 하숙에서 5,000여 장 정도가 인쇄되었다.⁴⁸⁾

제3단계에서는 인쇄물 배포를 위한 동지포섭 및 배포와 인산 당일의 거사로 이어진다. 5,000여 장의 격문을 1인당 1,000장 정도를 맡아 포섭된 동지에게 배포하는 한편, 6월 8일과 9일에는 시내 각 학교와 전국 주요 지방학교에 격문을 발송하면서 인산 당일의 거사를 추진시켜 갔다.⁴⁹⁾ 그런데 이때는 권오설 등의 계획이 발각되면서 일제의 경계와 압박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민하게 행동하면서 격문배포와 발송을 마칠 수 있었다. 박용규는 중앙고보생 조흥제에게 격문 200장을, 휘문고보생 이상민에게 100장을 교부하였고, 이동환은 중앙고보생 최제민에게 400장을 교부하면서 인산 당일 만세제창을 권유하였다.⁵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일정하게 연대해 갔다. 통동계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계획이 처음에는 각기 출발했어도 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과 통동계는 동지를 포섭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⁵¹⁾ 이들 두 세력은 거사를

46) 《경향신문》, 1963년 6월 10일.

47) 〈6·10만세운동 판결문〉(6·10만세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214쪽.

48) 박용규는 3만 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판결문에는 약 5,000장을 인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9) 이때 이들은 서울의 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선전문을 몰래 집어넣고, 지방의 학교에는 우편물로 발송하였다고 한다.

50) 중앙중고등학교, 《中央六十年史》(1969), 129쪽.

51) 李天鎮, 〈六·十運動의 回顧〉下(《獨立新報》1946년 6월 11일).

연합해서 추진할 뜻도 있었지만, 각기 별도로 추진해 왔던 것을 합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비밀을 보전하기 위해 각기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서로의 연락이 필요하므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이선호와 중앙고보 동급생인 이동환과 박용규 등이 양측에서 연락을 담당하면서 연대 투쟁을 추진해 갔다.

5) 만세시위의 전개와 성격

(1) 서울의 만세운동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계통의 거사계획이 因山을 불과 3일 앞두고 발각되자, 일제는 모든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면서 철통같은 경계를 펼쳐 나갔다. 그리고 사상단체 · 종교단체 · 학교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 검속을 단행하였다. 서울역 · 용산역 · 청량리역과 여관 · 음식점 등에 이르기까지 출입자에 대한 검문 · 검색도 강화해 갔다. 6월 7일 총독 사이토는 정무총감을 직접 지휘하여 조선군사령관과 함께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총력적이고도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 왔다.

서울에 동원된 일본 군대는 의장병 · 도열군대 · 봉결식장경계대 · 조포대 등 약 1만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삼엄한 상황이었다. 일제는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각도에서 경찰을 집결시켜, 3,500명의 경찰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헌병대사령부에서 나남 · 함흥 · 평양 등지로부터 응원 헌병을 충원하여 경찰의 경계를 지원했다. 그리고 장례인도에 기마경찰 · 헌병 · 정사복 경관 등을 총검으로 무장시켜 거리로 내몰아 인산 당일의 거리는 온통 일본군대와 헌병 · 경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일제의 검거를 피하여 사직동 李錫薰의 하숙집에서 격문을 인쇄하면서 거사 준비를 진행해 갔고, 통동계 학생들 역시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서 각 학교와 지방에 전단을 배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인산 당일의 만세운동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갔다.

인산 당일 장례행렬이 지나갈 연도 양측에는 약 2만 1,000여 명의 중등 이상 각급 학교 학생들이 도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의 도열 앞뒤로는 기마경찰과 헌병·사복경찰이 포위하며 엄중한 경계와 감시를 하고 있었다.

일제는 인산행렬이 끝나는 대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의 책임 아래 해산하도록 철저히 사전단속을 하였고, 또 당일날에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겹겹히 경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조선박람회⁵²⁾ 구경거리와 조선의 마지막 인산을 구경하고자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울역에서 승하차한 인원만도 6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무려 8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된 것이었다. 여기에 용산·청량리·왕십리역까지 합치면 10만 명을 훨씬 넘는 숫자였다. 한편 시내를 다니는 전차에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였고, 인산 껍데기인 7일에는 15만 명이 이용하여 일대 교통혼잡을 이루었다.⁵³⁾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 학생들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일제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망 속에서도 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인산 당일에 만세운동을 거행할 수 있었다.

1926년 6월 10일 장례행렬은 오전 8시 창덕궁에서 발인하여 종로 3가-청계3가-을지로3가-을지로6가-훈원원(영결식: 오전11시)-동대문-창신동-신설동-청량리-金谷裕陵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 학생들의 만세시위는 오전 8시 반 종로 3가의 만세시위를 신호탄으로 하여 모두 8곳에서 일어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성사 앞의 시위 : 오전 8시 반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행렬이 통과한 뒤 東洋樓 앞에 도열해 있던 중앙고보 이선희의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30~40명이 만세를 고창하면서 격문서 약 1,000여 장과 태극기 30여 장을 살포

52) 조선박람회는 융희황제의 국상중인 5월 13일부터 경복궁에서 열렸다.

53) 《동아일보》, 1926년 6월 9일.

하였다. 이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도 호응하면서 일대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로써 大興 뒤에 따르던 기병의장대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 돌아서서 달리는 바람에 군중이 이리저리 물리다가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이때 만세를 고창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학생은 연희전문학교 김규봉·이석훈, 중앙고보 이동환·박선석·홍명식·주공조 등 50여 명에 달했다.

- ② 오전 8시 40분 대여가 지나자마자 관수교 부근에서 연희전문학생 등 50여 명이 격문서를 살포하며 만세를 고창했다. 관수교 남쪽 부근에서는 이병립과 연희전문 박하균·이천진이 앞장서서 격문을 날리며 만세를 고창하자 학생들이 호응하였고, 이때 일경에 의해 주동인물인 이병립·박하균·이천진을 포함하여 학생 40여 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 ③ 오전 9시 반 경에 청년학원 생도 박두중 외 2명의 청년이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격문 1,000여 장을 살포하며 만세를 고창했다. 이때 만세시위는 격렬하게 이루어져 부근의 사범학교 담이 무너질 정도였다. 만세시위를 주도하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 박두중은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 ④ 오후 1시 경 훈련원 재전 부근에서 학생 1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고창했다. 훈련원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의 선창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 ⑤ 오후 1시 10분 경 동대문 부인병원 앞에서 대여가 지나간 후 《시대일보》 김락환외 2명이 격문서를 뿌리며 만세를 고창했다.
- ⑥ 창신동 채석장 입구에서 50세 가량의 사람이 만세를 고창했다. 홍종현(37세)이 혈서를 쓰고 투쟁에 참가하였다.
- ⑦ 오후 1시 45분 경 대여가 신설동 고무회사 앞을 지나갈 때 학생 1명이 격문서 100여 장을 살포했다.
- ⑧ 오후 2시 20분 경 동대문 밖 東廟 앞에서 학생 4명이 관수교 부근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격문서 700여 장을 살포했다. 살포한 학생은 ‘통동계’의 박용규·곽대형·황정환·이동환 등이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무렵까지 계속하여 일어났다. 학생들은 가슴에 간직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면서 준비해온 격문을 군중을 향하여 힘차게 뿌리면서 “大韓獨立萬歲”를 고창하였다. 일제의 그토록 삼엄한 경계와 철통같은 감시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여덟 곳에서 일어난 이날의 만세시위에는 500~6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⁵⁴⁾ 을지로 부근에서 일어난 시위는 사범학교 담이 무너질 정도로 격렬하

54) 《동아일보》, 1926년 6월 14일. 일제는 당초 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500~600명을 모두 검거하려고 했으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주동자만 대상으로 처리

였다. 동대문 앞 시위현장에서는 일본 기마병의 말발굽에 치거나 밀려서 쓰러진 사람들로 일대 혼잡을 이루었고, 70~80여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⁵⁵⁾ 그런 가운데 창신동 입구에서는 훌훌단신으로 혈서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고창한 홍종현 같은⁵⁶⁾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군중은 일제 기마병과 군경의 삼엄한 경계 아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중 가운데 몇몇 만이 호응하는 정도였고, 대부분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된 학생만도 210여 명에 달하였다.⁵⁷⁾

인산 당일 봉도에 참렬했던 시내 각 학교에서는 12일 返虜式⁵⁸⁾에도 봉영할 계획으로 있었다. 그런데 인산 당일에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 속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제 당국은 학생들의 봉영을 전면 금하고 경찰과 군인으로 대체하였다. 返虜행렬 때에는 동대문에서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연도에 2,000여 명의 경관을 배치하고 경찰부장 이하 각 경찰서장이 진두 지휘하면서 경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사복경찰을 골목마다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를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

일경의 물샐틈없는 경계 속에서도 새로운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의 계획이 추진되어 갔다. 배재고보생 문창모를 중심으로 기독교계통의 학생들은 인산 당일의 운동이 일반 민중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자 재차 만세운동을 계획해 갔던 것이다. 이들은 인산 당일 봉영대열에 있다가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55) 이때 만세고창으로 일대가 혼잡을 이루게 되어 이곳에서만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의 사정을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인 白石은 “자세한 통계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 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56) 홍종현은 경북 의성출신으로 3·1운동 때에도 만세시위에 참가한 경력의 열혈인사였다. 그는 단독으로 거사에 임하였으며, 혈서로 “독립만세”를 쓰고 그 가운데 태극기를 그린 것과 <우리는 자유를 얻고자 싸우자>라는 격문을 써서 거사 당일에 사용하였다.

57)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이때 체포된 학생들을 학교별로 보면, 연희전문 42명, 중앙고보 58명, 세브란스의전 8명, 보성고보 7명, 그 밖에 중등학교·양정고보·배재고보·송도고보 학생들이었다.

58) 장사를 지낸 뒤에 神主를 집으로 모셔오는 式을 말한다.

한 바 있었다.⁵⁹⁾ 그리고 만세현장에서 만세를 선창한 학생들이 일경에 잡혀 가는 것도 보았다. 그리하여 이에 자극을 받은 문창모·손성엽 등은 보다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평소 기독교학생회의 모임에서⁶⁰⁾ 친분이 있었던 7개 학교의 간부들과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때 7개 학교란 배재고보를 비롯하여 협성학교·피어선성경학원·기독교청년학원 등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⁶¹⁾ 그리하여 이들은 서대문 73번지에 소재한 피어선성경학원 기숙사에 모여 격문 수만 장을 인쇄하는 등 2차만세운동의 거사를 계획해 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탐지한 일경이 6월 16일 오후 2시 경 피어선성경학원 기숙사를 습격하여 동 학원생 우재현을 비롯하여 배재고보 김동진, 중앙기독교 청년학원 김동석 등 3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등사판 기계와 종이 수천 장을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⁶²⁾ 이어 18일 새벽 협성학교 김승호와 배재고보 5년생 문창모 등 4명이 정동에서 피체되면서 이들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들의 거사계획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일제의 경계와 감시가 그토록 삼엄한 속에서, 그것도 인산 당일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간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한 정의의 항거였으며, 그 정의의 항거는 일제의 온갖 탄압과 강제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적 의지의 표출이었다.

(2) 지방의 움직임과 만세시위

일제는 6월 6일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탄로남과 동시에 지방에서도 대대적으로 검색·체포에 나섰다. 일제의 탄압과 수색은 전국 각처에서

59) 문창모는 이때 수표교 근처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만세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한다 (〈문창모(1906년생) 증언〉, 1995년 6월 27일 면담).

60) 〈문창모의 증언〉.

61) 〈문창모의 증언〉에 의하면 이밖에도 정신여고보, 이화·연희전문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62) 《조선일보》, 1926년 6월 19일.

종교단체와 청년사회단체, 학생 등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검색·체포가 이루어졌다. 대구에서는 목사·사회단체 인사 20여 명이 서울의 만세운동 계획과 연결된 혐의로 체포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⁶³⁾ 평양에서는 노농연합회·청년동맹·면옥노동조합과 같은 대중단체나 사상단체에 대해 대대적 수색에 나서는 한편 ‘요주의’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취하였다.⁶⁴⁾ 신천의 경우처럼 학교장 및 교원들이 검거되는가 하면, 친목회의 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등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6월 8일부터는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철야 경계에 돌입하였다. 기차역이나 주요 지역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마치 계엄상태의 분위기로 몰고 갔다. 일제 군경은 시내의 여관이나 음식점 등을 수색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를 보이면 검속하는 한편 사람의 왕래가 잦은 정거장 등에서 왕래객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단행하였다. 지방 각지에서 인산 붐도를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갓은 구실을 붙여 억제, 저지하였다. 그것은 3·1운동 때 상경하여 인산에 참가했던 지방인사들이 귀향하면서 만세운동을 전파하였던 경험에 의거하여,⁶⁵⁾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만세운동의 조짐이 지방으로 파급될 여지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였던 때문이다. 철통같은 경계를 펼치던 일제는 인산 당일인 6월 10일 새벽 전국에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요주의’인사들을 강제 구금하였다. 이는 혹시나 인산 당일에 만세시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한 최종의 사전 봉쇄책이었다.

일제가 이렇듯 전력을 기울인 것은 3·1운동 때 지방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저지치 못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3·1운동 때 일제는 만세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리라고 전혀 예기치 못하다가, 만세운동이 불같이 번져 오른뒤에야 폭압적으로 ‘진압’에 나섰다.⁶⁶⁾ 따라서 융희황제 인산

63) 이들은 융희황제 인산 직후에 무혐의로 풀려 나왔다(《동아일보》, 1926년 6월 14일).

64)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65) 이정은, 〈3·1운동의 지방확산 배경과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311~314쪽.

66) 윤병석, 〈3·1운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417~418쪽. 3·1운동의 초기에 일제는 전민족적인 만세운동으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처음에는 민족자결주의의 영

때에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제의 무력을 총동원하며 아예 만세운동의 기미를 싹부터 잘라버리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제의 대응과 탄압은 6·10만세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지 못한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융희황제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한국인은 전면휴업, 撤市에 들어가 근신하는 것과 함께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망곡과 봉도식은 成服日⁶⁷⁾ 5월 1일 무렵까지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4월 29일 통곡의 현장에서 심훈이 읊은 〈痛哭속에서〉라는⁶⁸⁾ 애도시에서 묘사되듯이 한국인은 일제 군병의 총검과 말발굽 아래에서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통곡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일제의 통제 속에서 일제 보도금지되었던 4월 28일의 송학선 의거에 대해 5월 2일 보도통제가 해제되자,⁶⁹⁾ 각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5월 10일부터 6월 초까지는 망곡과 봉도가 뜸해지다가 인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처에서는 봉도단을 구성하여 상경을 준비하였으며, 인산일에는 전국에서 일제히 망곡과 봉도식을 거행하였다. 망곡과 봉도에 참가하는 계층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연령별로는 유치원생에서 보통학교생·청년·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업별로는 학생·상인·이발업자·유림·직공·기생·불교승려·목사·역부·관리·서적상·한약상 등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전 민족적으로 참가하였다.⁷⁰⁾

나이 어린 幼年會나 소년회, 보통학교 학생들이 망곡과 봉도를 독자적으로 거행했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고등보통학교 학생보다 보통학교 학생들이 월

향으로 일부 운동자의 '선동'에 의해 일어나는 정도로 판단하고 주동자만 체포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만세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일제는 국내 주둔의 조선군 19·20 사단, 헌병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67) 成服日이란 초상이 났을 때 喪服을 처음 입는 날이다.

68) 《시대일보》, 1926년 5월 16일. 《시대일보》에는 본명인 沈大燮으로 기재되어 있다.

69) 《시대일보》, 1926년 5월 2일.

《동아일보》, 1926년 5월 2일.

70) 장석홍, 〈융희황제 인산 전후 지방의 동향과 만세시위〉(《한국학논총》 2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7), 123~130쪽.

등히 많았다. 그것은 당시에 고등보통학교가 도청소재지 정도에만 세워질 정도로 적었던 때문도 있겠지만,⁷¹⁾ 지방에서는 학생층의 경우 보통학교가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린 幼年들까지 망곡에 참여할 만큼 애도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적어도 애도의 정도는 1919년 光武皇帝의 승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⁷²⁾

그러나 학생들의 민족적 정서는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 당국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망곡과 봉도식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교장 및 교원은 학생들에게 온갖 형태의 탄압을 자행하였고, 이로써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측에 대항하며 휴학을 단행하거나, 학교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봉도식을 거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제 금구보교·홍성보교·여산보교·원주보교·강화길상보교·영일보교·울산보교·강경보교·삼천포보교·홍덕보교·덕산보교·나주보교 등에서는 학교측이 망곡이나 봉도를 억제함으로써 학생들은 盟休로 대항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 학생들이 봉도를 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맹휴를 하고 서울로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이때 학교측은 주동학생을 구타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강경보통학교에서는 허가없이 망곡했다고 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하는가 하면, 서산에서는 학생들이 시내 상점의 철시를 권고했다고 하여 20일간 구류를 받고, 연천에서는 망곡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 주의를 받았다. 철원보교에서는 학생이 모자에 북포를 돌렸다고 해서 교사에게 구타당하기도 했다. 또한 부여보통학교, 대구 예수교 경영학원 순도학교, 공주보교에서는 국상 중에 금지된 창가와 가무를 교습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71) 1925년도 기준으로 볼때, 전국에 고등보통학교는 23개교에 학생수는 10,185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서울 소재의 학교를 제외하면 지방에는 도청소재지에 세워지는 정도였다. 이밖에 사범학교는 14개교에 2,373명이었다(《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25년도 教育條 참조).

72) 광무황제의 국상을 당하여 《每日申報》는 1919년 1월 27일부터 인산 전날인 3월 2일까지 〈國葬彙報〉를 통하여 국장에 관한 소식들을 보도하였고, 望哭과 奉悼에 대한 것은 산견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每日新報》가 민중의 동향보다 일제 당국의 행사에 관심을 표명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맹휴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강화도 길상보통학교에서는 학생들이 喪章을 달았다고 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을 구타한 일이 있었고, 이에 항거하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특히 길상보통학교의 맹휴는 학교측의 탄압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민족감정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탄압은 여전히 자행되면서, 보통학교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소환하여 제재하는 일도 있었다.⁷³⁾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망곡과 봉도식이 설령 거행되더라도 그 행사는 반드시 일본인 교장의 주도하에 치루어졌다. 원주보통학교의 경우, 융희황제 인산과 서울에서 6·10만세운동의 소식을 들은 6학년 학생과 고등과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맹휴에 들어갔으며, 상급생들은 학교의 뒷산 鳳山과 南山 숲속에서 서울 방향을 향하여 망곡을 하며 나라 없는 설움을 달래었다. 그런데 정보를 접한 일경이 추격하자, 학생들은 산길을 따라 탈출하여 이른 날에도 동맹휴학을 이어 나갔다. 그리하여 하는 수없이 일본인 교장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망곡제를 거행할 것을 제의하여 겨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⁷⁴⁾ 이렇듯 보통학교를 중심한 지방에서의 맹휴는 망곡과 봉도를 금지하는 학교 당국과 이에 대항하는 학생층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지방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경우를 보면, 고창보통학교와 인천 만국공원에서 수십 명 규모로 만세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혼자 또는 몇 사람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완도의 모도청년회는 만세운동을 추진하다가 사전 발각되기도 했다.

고창보통학교의 만세시위는 특히 주체가 보통학교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무렵 학생운동은 고보생이나 전문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6·10만세운동 때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의 경우도 전문학교 학생과 고보생이 중심을 이룬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같은 학생운동단체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⁷⁵⁾ 그런 점으로 볼 때, 보통학교 6학년인 10대 중반

73) 장석홍, 앞의 글(1997) 참조.

74) 趙東杰, 《太白抗日史》(강원일보사, 1976), 248~250쪽. 그러나 이 일로 일본인 교장 篠原實은 파면조치되었다고 한다.

75) 장석홍, 앞의 글(1994) 참조.

의 어린 소년들이 만세를 고창하고 나선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식민지통치체제 아래 태어나서 성장한 이들이 또한 조직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했다는 사실은 식민지 통치의 모순을 극명하게 노정시킨 상징적 사례인 것이다.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는 전남 영광의 송형욱 부부, 함남 풍산의 유재봉 같은 열혈청년, 춘천의 김상식, 신의주의 문봉순 등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한편 안성에서의 선언서 배포, 고원에서 천도교 종리사 김태일이 해외 독립군단체에서 반입된 선언서를 등사하여 배포하다가 발각된 사실, 진주지방의 봉도식에서 선언서 수집 장이 유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산을 전후한 시기에 만세운동과 같은 조짐이 다양하게 일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해외독립군단체에서 선언서가 반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가 불명하지만, 진주지방에 선언서 수집 장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서울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계획되어 간 모습들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산발적이거나 인산 당일을 기해 각처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공주 유림 廬榎이 민족적 울분이 솟구쳐 자살을 기도한 사례들은 일반 대중에 잠재된 항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항일의식의 분출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에 의해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채 차단되고 말았다.

6) 6·10만세운동의 이념

6·10만세운동 당시 작성된 격문이나 전단 등은 크고 작은 것들을 포함해 8종이 확인된다.⁷⁶⁾ 권오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大韓獨立黨 명의의 〈檄告文〉과 그밖의 전단들인 〈大韓獨立萬歲〉·〈大韓獨立運動者여 團結하라〉·〈朝

76) 이석태, 《사회과학대사전》(1948), 487쪽에는 6·10만세운동 때 20여 종의 선전문이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격고문〉과 傳單의 각 항목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4개의 전단 속에 들어있는 항목들이다.

鮮人 敎育은 朝鮮人本位〉·〈산업은 조선인본위〉 등과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의 기관지 불꽃사 명의로 작성한 〈腹喪 慟哭하는 民衆에게 檄함〉, 그리고 학생주체들이 작성한 2개의 짧은 격문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격고문은 6·10만세운동의 始原을 3·1운동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독립은 정의와 평화의 실현으로 정의되고 있음도 살피진다.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조선독립만세’의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絶對獨立을 최고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격고문은 구체적 방법으로써 일제의 침략으로 死地에 놓인 상황에서 망국과 같은 감상적 설움만으로는 독립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혁명적 민족운동자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즉 망국의 통한을 망국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독립 달성을 위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고문의 이같은 논리는 3·1운동 당시 선언서의 논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에서는 대체로 세계개조의 분위기에서 인도주의·민족자결론·고유주권설 등에 따라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다.⁷⁷⁾ 그리고 일본을 경제적 침략자로 규정할 안목을 갖지 못한 채, 정치적 침략주의·강권주의·제국주의 등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침략뿐 아니라 경제적 침략의 관점에서도 일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격고문의 논리는 3·1운동 때 자유주의의 논리에 비해 그 사상적 기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사회주의의 수용과 더불어 성숙되어간 민족이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민족을 총체적으로 무산자계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계급으로 규정

77) 3·1운동 당시 선언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때문에 3·1운동의 독립논리는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국제감각은 세계개조의 시기로 보았고, 독립논리는 인도주의에 바탕한 동양평화론과 민족자결론이 주되었으며, 방략으로는 광명정대한 전민족의 시위, 국제회의에 대한 기대, 독립군의 살신성인 등으로 표현되고, 독립국가상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趙東杰, 앞의 글, 1989, 398~404쪽).

하면서, 민족적·정치적 해방과 계급적·경제적 해방을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분리하지 않은 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격고문의 논리는 계급지상주의에 대한 편향성이 극복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민족혁명을 위해 자유주의자와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이론적 단서로도 주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운동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⁷⁸⁾ 노선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은 ‘대한독립당’ 명의로 격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한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단체의 명칭에서도 민족혁명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단에서는 당시 식민지 한국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던 당면과제들이 거의 망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부문의 문제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만세운동의 확산과정에서 모든 계층의 참여를 기대하였던 때문으로 이해된다. 계급적 구호가 강조되지 않는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3·1운동과 비교할 때 운동의 기반과 이념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경험 위에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운동의 주체와 이념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며, 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해 갔던 것이다. 이는 민족혁명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뜻하는 것이었다.

7) 6·10만세운동과 그 영향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에 대한 반응은 중국 상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상해는 앞서 보듯이 6·10만세운동의 진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혁명청년사는 1926년 7월 3일자 기관지 《혁명청년》 창간호에서 <6월운동의 경과와 소감>이라는 기사를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며,⁷⁹⁾ 이어 같은 해 7

78) 이는 1926년 5월 초 김단야가 권오설에게 융희황제의 승하를 기회로 삼아 만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된 바 있다(지중세 역편, 앞의 책, 40쪽).

월 16일에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과 함께 김규식·송병조·이윤희·정인교·강경선·최석순·곽헌·황훈 등의 발기로 三一堂에서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연설회에는 상해거주 한국인 약 200명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는 김단야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안창호의 연설회가 있었는데,⁸⁰⁾ 여기에서 안창호는 6·10만세운동이 전연 자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고, 이 운동은 동학농민전쟁과 독립협회의 근대적 개혁운동에서 시원을 이루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6·10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통일기관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으니, 여기서 민족적 통일기관이란 주의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혁명당’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대당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세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무령 洪震은 1926년 7월 8일 임시의정원 취임식에서 제시한 시정방침의 3대 강령에는 민족대당의 조직을 천명하였다.⁸¹⁾ 이로써 민족유일당운동의 깃발이 올려졌던 것이다.

한편 6·10만세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의 조직은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6·10만세운동의 정신은 국외의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에 의해서 다시 표방되기에 이르게 되니 1926년 7월에 발표된 〈조선공산당선언〉이 그것이었다. 여기에서는 6·10만세운동을 민족운동노선의 전기가 가져온 민족적 유일전선의 기초작업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은 조직적 지도와 철저한 목적, 표어 및 투쟁방침을 세우고 민족운동자와 공산주의자가 동일대오에 서서 이루어 놓은 민족운동사의 업적이라 하였다. 즉 6·10만세운동을 좌익운동도 우익운동도 아닌 유일전선이 이끈 민족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다.⁸²⁾ 6·10만세

79) 革命靑年社, 〈今回六月運動の 經過와 所感〉(《革命靑年》創刊號, 1926년 7월 3일).

〈不穩雜誌 ‘革命靑年’ニ關スル件〉(朝保秘八三四號, 大正十六年 八月 十六日;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자료 551~573쪽에 일어로 번역).

80)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601~602쪽.

81) 시정방침의 3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 一.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신운동을 촉진할 것.
- 一.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당체를 조직할 것.
- 一. 전세계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또 연락이 가능한 우방과 제휴할 것(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2, 1967, 323쪽).

82) 姜萬吉, 〈韓國獨立運動의 歷史的 性格〉(《亞細亞研究》59, 1978), 30쪽.

운동의 통일전선은 <조선공산당선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또한 상해에서 안창호가 주창한 유일당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흥회가 성립되어 통일전선의 새로운 단계로 접입하였다.

6·10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제2차 조선공산당이 궤멸되는 상황에서도 통일전선의 흐름은 새로운 세력에 의해 추구되었다. 또한 6·10만세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천도교 구파의 진영에서는 반자치론, 특히 최린 등의 타협적 세력과 노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운동상에 통일전선의 흐름을 진작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신간회발기회에 참가했던 사실은 그와 같은 흐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張錫興〉

2. 신간회운동

신간회는 일제시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정치단체 중 가장 큰 결사체였다. 신간회는 1927년 1월 15일 창립하여 1931년 5월 16일 해소될 때까지 만 4년 4개월 동안 존속했으며, 지방의 지회조직은 150여 개, 회원 수는 4만여 명에 달하였다. 신간회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만한 규모·활동력·존속기간을 가졌던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시기 민족운동사상에서 신간회가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양적인 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신간회는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단체였다. 신간회에서의 양 세력의 협조와 협동경험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이 계속되는 현재에도 귀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양 세력의 바람직한 협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양 세력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협조와 협동 경험 또한 반성과 반추의 역사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간회에서의 양 세력의 협동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만나 최대의 협동을 이루었으나 이후 양 세력 분열의 원형을 보여주는 신간회에 대한 검토는 남

북이 분단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1) 창립 배경

신간회의 창립은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협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세력이 신간회 창립에 나서게 된 계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민족주의세력은 당시 풍미하던 자치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신간회 창립에 나서게 되었고, 사회주의세력은 그들의 운동노선인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민족주의세력은 소위 민족주의 좌파 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민족주의 우파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세력이 주장하던 자치운동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자치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가을부터였다. 동아일보사와 일부 천도교 간부들이 주동이 된 민족주의 우파진영은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총독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우익세력단체인 研政會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李光洙로 하여금 이 조직의 이념적 지향이 될 〈民族的 經綸〉이라는 논설을 《동아일보》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설이 자치운동에 대한 주장이라고 하여 세간에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민족주의 우파측의 연정회 조직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¹⁾ 자치론이 재차 시도된 것은 1926년 9월 말이었다. 9월 말 자치운동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한 민족주의 우파세력은 10월 초순 조직 준비에 착수하여 朴熙道 · 金俊淵 · 趙炳玉 · 金麗植 · 崔元淳 · 韓偉健 · 沈友燮 · 崔南善 · 李光洙 · 卞榮魯 · 金鑽永 · 洪命燾 · 朴承喆 · 白寬洙 · 閔泰瑗 · 洪秉璇 · 金弼秀 등과 개별접촉에 나섰다.²⁾

1) 〈민족적 경륜〉의 핵심적 내용은 “총독부가 허하는 범위 내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적 경륜〉은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타협주의 세력과 비타협주의 세력의 대립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2) 이때 자치운동에 반대하고 있던 조선일보사의 安在鴻과 金俊淵이 이 사실을 民興會 회원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민흥회의 明濟世는 최린을 찾아가 만약 자치운동단체 조직을 강행할 시에는 이를 극력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0월 13일 자치운동자들은 시사간담회라는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발기계획을 발표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금 곧 민족주의단체를 조직해야 할 필요도 없고 경비와 인물도 없으니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논의후 해산하였다.³⁾ 이러한 자치론자들의 동향은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의 경계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은 ‘民族黨’ 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신간회 결성에 임하게 되었다.⁴⁾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 시도는 신간회 이전에도 시도된 바가 있었다. 朝鮮共產黨은 1926년 2월 26일 제13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족해방의 조선독립과 공산정치의 통일기를 획책하고 민족·사회 양 운동자를 통일하기 위한 國民黨조직의 전제로서 천도교를 기초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⁵⁾ 이 결의는 사회주의자들이 행한 최초의 민족협동전선 논의라는 점과 구체적인 조직방법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결의에 따라 당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姜達永은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접촉하였다. 1926년 3월 10일 천도교 간부 權東鎭의 집에서 李鍾麟·申錫雨·安在鴻·權東鎭·朴東完·吳尙俊·俞億兼 등 7인과 회합하고 비타협적 민족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공동작전을 펴는 데 대해 논의했다. 그후 1926년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제2차 조선공산당 당원에 대한 검거로 당이 와해상태가 되자, 조선공산당의 민족협동전선론은 제3차 조선공산당으로 계승되어 나갔다.

신간회 창립배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우회선언>이었다. 이를 주도한 단체는 一月會였다.⁶⁾ 창립시부터 국내운동의 파쟁을 비판하고 민족협동전선을 표방하였던 일월회의 지도자 安光泉은 河弼源 등과

3) <民族運動概觀>(《齋藤實文書》, 고려서림 영인본, 1926), 238~240쪽.

4) 자치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찬승, 앞의 책 참조.

5) 京城地方法院檢査局, 《第2次朝鮮共產黨事件檢舉ニ關スル報告綴》(1926)(《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1986, 청계연구소, 373~377쪽 재인용).

6) 일월회는 1925년 1월 제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北風會의 제일본조직인 北星會를 해체하고 조직한 사회주의단체였다. 설립 당시 회원수는 많지 않았으나 여타 제일조선인단체의 간부를 겸하는 인물이 많았던 관계로 제일조선인운동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1926년 8월 하기 휴가를 맞아 귀국하였다. 귀국후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국내 사회주의운동세력이 위축된 사실을 알게 된 안광천 등은 곧바로 正友會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우회의 주도세력은 화요회를 중심으로 한 四團體合同委에서 일월회 계열로 바뀌었다. 정우회를 장악한 안광천·하필원 등은 1926년 9월 28일 정우회 위원을 補選하여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한편, 11월 15일 〈정우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때 이미 안광천은 金鉞洙에 의해 재건된 제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도 겸하고 있었다. 이 정우회선언은 후일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에 참여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 중요한 선언이었다. 정우회선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과거의 분열에서 벗어나 사상단체를 통일하고 구체적으로 전위적 운동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을 통하여 대중을 조직화하고 질적·양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그것을 기초로 일상투쟁을 하여야 한다.
 - ③ 종래의 국한되었던 경제적 투쟁에서 계급적·대중적·의식적 정치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 ④ 이론투쟁으로 운동의 진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

이 정우회선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③항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전환의 내용과 민족협동전선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우회선언이 발표되자, 정우회와 조직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서울청년회는 정우회선언을 놓고 내부 진통의 결과, 신·구파로 대립하였다. 신파는 정우회선언을 찬성하였으며 구파는 종래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구파의 영향하에 있었던 前進會는 1926년 12월 15일 정우회선언에 대한 결의문과 검토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진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청년회 구파의 정우회선언에 대한 〈검토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우회선언은 국내외 수많은 사상단체 및 노동·청년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는 사회주의 단

체가 민족협동전선에 대해 결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1926년 초 사회주의세력은 크게 4단체합동위와 전진회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때 4단체합동위는 동 단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화요회·북풍회의 간부 다수가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사건으로 체포된 까닭에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전진회는 1926년에 들어서 민족협동전선을 예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한 조치로서 전진회는 1926년 2월 20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발의하였다. 전진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의 민족해방운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1926년 3월 전진회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결성된 비타협적 민족유일당운동단체인 民族黨籌備會에 참여하였다. 전진회의 주도세력인 서울청년회 세력은 민족당준비회가 국내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을 기회로 자파 중심의 朝鮮民興會를 발기하였다.

1926년 7월 8일 朝鮮物産獎勵會館에 모여 발기된 조선민흥회는 서울청년회계의 사회주의자들과 조선물산장려회계의 민족주의자들의 제휴로 이루어진 한정된 규모의 민족협동전선이었다. 조선민흥회의 발기취지는 “조선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분투 노력함에는 반드시 전 민족적인 각 계급의 역량을 총집중할 조직력의 활동으로서야 가능할 것이므로 조선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유일한 조직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민흥회 발기준비회를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립준비위원과 상무위원까지 선출한 조선민흥회는 일제에 의해 발기총회와 창립총회를 모두 금지당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27년 2월 11일 조선민흥회는 신간회 대표들과 회동하여 신간회에 무조건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신간회의 창립

1926년 후반,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를 조직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던 천도교 신과의 최린과 동아일보사의 金性洙·宋鎮禹 등은 다시 비밀리에 자치운동단체를 조직하려 하였다. 물론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들의 자치운동단체 재결성 움직임은 신간회를 발기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일제가 포착한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26년 말 우연히 평안북도 정주 소재 오산학교 교사로 있던 홍명희는 동기 휴가를 이용하여 경성에 와서 최남선을 방문한바 최남선으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전해듣고 동시에 서로 자치문제에 대하여 밤을 밝히며 토의하였다. 다음날 홍명희는 안재홍을 방문하고 신석우를 초치하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급속히 진실된 민족당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권동진·박래홍·박동완·한용운·최익환 등의 찬동을 얻어 홍명희로부터 재북경 신채호에게 飛檄하여 역시 찬동을 얻어 발기인에 참가시키고 당국과 접근성을 가진 신석우를 개재하여 그 양해를 얻고 ‘新幹出古木’이라는 말에서 취하여 신간회란 명칭을 정하였다(警高秘 第8036號 京畿道, 《秘密結社朝鮮共產黨竝ニ高麗共產青年會事件檢舉ノ件》; 姜德相·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972, 95쪽).

즉 신간회의 발기논의는 자치론자들의 자치운동 소식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추진된 점으로 보아 최소한 1926년 12월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간회 발기 움직임은 1927년 들어 더욱 진전되었다. 동년 1월 초 권동진·홍명희·박동완·李甲成·韓基岳 등은 조선일보사에서 회합하여 신간회 발의를 합의하고 발기인들과 접촉하여 가입 승낙을 받는 동시에 강령을 초안하는 등 창립준비를 서둘렀다.⁷⁾ 그 결과, 1월 14일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조선민족으로서 정치·경제의 究竟의 해결을 도모한다.
- ②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은 일제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간회 준비인사들은 일제 당국과 절충하여⁸⁾ 다음과 같이 수정된 강령을 발표하였다.

- 一.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一. 우리는 단결을 견고히 한다.

7) 李炳憲, 〈新幹會運動〉(《신동아》 60, 1969), 194쪽.

8) 명칭·강령 등에 대한 당국과의 절충은 조선일보사 부사장이었던 申錫雨가 담당하였으며 조직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은 천도교에서 부담하였다.

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위 강령은 1927년 1월 19일 27인의 명의로 신간회가 정식 발기되는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신간회 창립 때 간부진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계 : 李商在 · 安在鴻 · 申錫雨 · 李昇馥 · 張志暎 · 崔善益 · 韓基岳 · 洪性熹 · 李晶燮

기독교계 : 朴東完 · 曹晚植 · 金永燮 · 朴熙道 · 吳華英 · 兪珏卿 · 鄭春洙

불교계 : 韓龍雲

천도교계 : 權東鎭 · 朴來泓 · 李鍾麟

유림계 : 金明東 · 李 淨 · 河載華

조선공산당계 : 金俊淵 · 李錫薰 · 韓偉健 · (洪命熹) · 宋乃浩

학계 : 兪億兼 · 李順鐸 · 金活蘭 · 趙炳玉

이들 중 권동진 · 김명동 · 박동완 · 백관수 · 신석우 · 신채호 · 안재홍 · 장지영 · 하재화 · 한기악 · 한용운 · 홍명희 · 이정섭 · 이중린 · 권태석 · 명제세 · 박희도 · 송내호 · 오화영 · 정춘수 · 최익환 등 23명은 2·8독립선언에 가담하였거나 3·1운동 관계자,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즉 3·1운동 이후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1920년대 전반기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 2월 15일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신간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250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방청인까지 합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⁹⁾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신석우의 진행으로 서기와 사찰의 선출, 회원점명, 조선민흥회와의 합동 경과보고, 편의상 신간회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는 보고 등이 있었다. 회장에는 李商在가 추대되었고 부회장에는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서 일제가 선언 발표를 금지시킴에 따라 규약대강만 통과되었다.¹⁰⁾

이와 같이 신간회의 창립은 민족단일당 또는 민족유일당의 매개형태로서 일단락되었다. 신간회 창립의 직접적 계기는 민족주의 좌파를 중심으로 한

9) 《조선일보》, 1927년 2월 16일.

10)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

反自治論에 있었다. 또한 1925년 1월부터 조선 국내의 여러 세력들이 제기한 민족협동전선론과 그에 따른 실천들이 근거하고 있었다.

(1) 사회주의자들의 신간회운동론

〈정우회선언〉 이후 정우회는 협동전선 결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산하 사상단체들을 해체시켰다. 반면 서울청년회는 정우회선언에 대한 〈前進會檢討文〉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간회운동론인 사상단체찬반론·兩黨論·清算論의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었다.

전진회는 정우회선언 내용 중 민족협동전선 결성에는 적극 찬성하였다.¹¹⁾ 우선 전진회가 발표한 검토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우회선언이 주장하는 협동전선을 만드는 데는 찬성하나 그것은 타협운동이다. 어떠한 조직에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독자성 혹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형태로 제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언명되어야만 타협운동의 비난을 벗어날 수 있지만 정우회선언은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진회검토문〉이 발표된 다음, 이른바 兩黨論을 내세우는 빌미가 되었다.

둘째, 정우회선언은 부르주아세력을 일시적 동맹자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진회는 ‘언제까지 동맹할 것인가’와 ‘어떻게 동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우회선언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정우회선언은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일층 계급적·대중적·의식적인 정치형태로 비약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정치적 투쟁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 사회주의운동이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이 합법적 명분을 가진 무산계급정당으로 의회로 진출해야 할 것인가 혹은 비밀전위당으로 공산당을 우선 조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11) 水野直樹, 〈新幹會運動に關する若干の問題〉(《朝鮮史研究會論文集》 14, 1977), 97~98쪽.

———, 〈新幹會の創立をめぐつて〉(《近代社會社會思想》, 1977), 292쪽.

되어 있었다.

정우회와 조선공산당은 정우회선언 발표를 전후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모든 사상단체를 해체시키려고 하였다.¹²⁾ 사상단체 해체에 관한 논의가 지상에 등장한 것은 정우회선언이 발표된 1926년 11월이었다. 한편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인 정우회는 선언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사상단체의 해체공작을 시도하고 있었다. 舜昂이란 필명의 글 〈사상단체에 대한 나의 偏見〉에서는 사상단체 해체는 不可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사상단체 통일체로서의 단일사상단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우회-조선공산당세력과 진진회-서울청년회 사이에 치열한 찬반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사상단체해체론의 요점은 ① 사상단체가 계급운동의 원시적·양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소임은 끝났다. 따라서 이제는 목적의식적·진계급적 정치운동의 단계이므로 단일통제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상단체는 그 형성에 방해가 된다. ② 사상단체는 파벌대립의 온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상단체 해체반대론자들은 ① 단일통제기관이란 결국 계급정당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며 신간회는 계급정당이 아니라는 점, ② 사상단체의 소임은 계급운동의 양적 팽창에도 있지만 그보다 질적 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현실의 운동의 질은 유치한 단계라는 점, ③ 사상단체가 파벌대립의 근원이라면 노동·농민·청년·여성단체 등도 해체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사상단체해체반대론은 “민족당 혹은 민족단체의 강령을 승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서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계급적 정신을 고양·결정하려는 것이 동기가 되므로 민족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상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는 없다”¹³⁾고 대응하였으나, 그것은 새로운 이론적 해답이 되지는 못했다. 사상단체에 대한 논의는 1927년 4월 이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서울청년회가 사상단체해체반대론이나 〈진진회검토문〉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兩黨論으로

12) 사상단체는 사회주의사상을 연구·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법단체인데 실체로는 지하 공산주의그룹의 전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3) 독고독, 〈사상단체 해체 是非〉(《조선지광》 65, 1927), 3·9쪽.

이어졌다.

양당론은 전진회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표명한 것으로, 무산계급정당과 민족단일당이 병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진회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조직을 결의한 것은 1926년 2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전진회가 양당론을 구상한 것은 그 이전부터로 보인다. 전진회는 구상대로 1926년 2월 무산계급정당의 준비기관으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7월에는 조선민흥회를 발기하였다.¹⁴⁾

전진회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무산계급정당의 준비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첫째, 전진회는 이미 민족협동전선이 결성될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과 주도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비하였다. 둘째,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무산계급정당의 준비기관’이므로 조선공산당과 같은 지하단체는 아니지만 그 명분은 지하단체가 말할 수 없는 계급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조선공산당과 같은 지하당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조선공산당과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조선공산당에 대한 조직적 대립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1926년 5월 그 산하단체들을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가입시킴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자파 중심으로 이끌어 가거나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는 1927년 5월 16일부터 3일간 열렸다. 대회 첫날, 발언권을 얻은 在日本無産靑年同盟의 崔益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非常設論이다. 그것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일시적인 조직으로 그치게 하자는 주장이며,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실제기능을 분산 혹은 파괴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둘째,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와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로 성립된 신간회가 두 개의 정당으로 서로 대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⁵⁾ 양

14) 일제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조직이 결의된 것은 전진회가 조선공산당 제1차검거사건으로 조공계의 세력이 약화된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론이란 명칭은 바로 최익한의 이 주장에 의해 연유된 것으로서, 이 발언은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양당론은 첫째, 전진회가 이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전진회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상설기구화하려 하였으나 조선공산당 계열과 조직적 대립을 거친 끝에 비상설화됨으로써 사실상 이 논쟁이 실천적 문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둘째, 또한 양당론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와 신간회를 두 개의 정당, 즉 전자를 무산계급정당으로, 후자를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로 규정한 조선공산당 계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붙여진 명칭이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 이미 코민테른의 조선지부로 승인된 상황에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가 정당으로 규정된다면 무산계급운동기관으로서의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존립 명분과 이론적 기반을 잃고 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공산당 계열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정당적 조직으로, 전진회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가 정당은 아니나 존립시킬 가치가 있는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논쟁의 핵심을 두었다.

셋째,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존립가치란 바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분리는 예비한 무산계급정당의 준비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정당은 그 조직 내에 각종 조합(단체)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준비기관 역시 의회적 기능의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형식으로 존재하여 각 단체들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지하의 조선공산당이 맡을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조선공산당측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가 신간회에 대항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진회측은 두 단체의 관계에 협동과 대립이 병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협동은 반제투쟁에서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이 필요한 것은 계급적 독자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섯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과 주도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파벌 의식과 더불어 양당론이 대두되는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였다.

15) 《동아일보》, 1927년 5월 18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는 결국 상설과 비상설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비상설을 주장하는 조선공산당측이 승리함으로써 일시적 단체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양당론의 종결은 “그치지 않던 파쟁에 종막을 단게 된 것과 조선내 모든 운동세력이 단일화되는 동시에 옳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대중에게 자각시켰다.”¹⁶⁾

한편 清算論은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에 사회주의자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이론이다. 그 내용은 계급적 독자성을 버리고 신간회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전진회가 새로운 비밀전위당인 비이론과 조선공산당(일명 春景園黨)을 조직하는 전략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었다. 청산론자로 불렸던 사람은 張日星 · 洪陽明 · 朴衡秉 · 尾星生 · 扶蘇山人 · HS생 · 金萬圭 · 權泰錫 · 洪起文 · 許一 등이었으며,¹⁷⁾ 이들은 주로 서울청년회 계열의 인물들이었다. 청산론은 사상단체해체반대론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제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청산론은 프롤레타리아운동이 민족운동내의 한 ‘요소’, 한 ‘경향’이며, 신간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산론은 신간회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기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이 파쟁의 전술로 제기된 것이었다. 즉 당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안광천이 신간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해체모니 쟁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된 것이 바로 청산론이었다.

3) 복대표대회와 신간회의 정비

신간회 지회 설립은 1928년 초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신간회본부 또한 ‘정치적 투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 시기의 계몽적 차원의 운동방침만을 천명하고 있었다. 일제

16) <사회단체중앙협의회 상설론>(《현대평론》, 1926. 6), 1쪽.

17) 讚注生, <조선청년총동맹집행위원장 박형병씨를 駁함>(《조선지광》 77, 1928), 75쪽.

光 宇, <清算主義의撲滅と朝鮮XX黨當面の中心的問題>(《朝鮮前衛黨當面の問題》, 42~44쪽; 《理論鬭爭》 5(1928), 3·20쪽).

는 제3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 등을 빌미로 1928년 2월의 제1회 신간회 정기대회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후 신간회에 사회주의 세력이 대거 참여한 사실을 간파한 일제는¹⁸⁾ 신간회에 대한 탄압과 압박정책을 강력 시행했다. 일제는 신간회의 또 다른 핵심세력인 《조선일보》에 대해 압력을 가하였다. 일제는 《조선일보》 정간 해제를 조건으로 신간회에 참여한 《조선일보》 사원의 탈퇴를 요구하였고,¹⁹⁾ 이를 《조선일보》측에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신간회 활동의 주축 중 하나였던 《조선일보》계의 후퇴는 신간회 활동의 직접적인 위축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2월 제2차 정기대회 또한 일제에 의해 금지되었다. 신간회는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다. 이를 위한 교육책이 정기대회를 대신하는 複代表大會라는 초유의 형식을 안출한 것이었다. 신간회는 복대표대회를 통해 許憲 집행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고, 사회주의자들은 대거 중앙집행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신간회 강령과 규약 개정을 통해 지방지회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민중대회 사건을 추진하는 등 신간회 존립기간 중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²⁰⁾

(1) 복대표대회 개최와 규약 개정

1929년 신간회 제2차 정기대회가 일제에 의해 금지되자, 동년 3월 신간회 본부는 정기대회에서 개정하려던 규약 초안을 각 지회에 배포하여 본부의 임원개선방법 등에 대한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부의 지시에 따라 각 지회는 토의를 진행시켰다. 이때 1929년 4월 경성지회가 최

18) 1928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조선공산당 사건에서 관련자의 약 40%가 신간회 회원으로 밝혀지는 등, 신간회 창립부터 1930년 6월 16일까지 일제에 검거된 조선공산당원 중 신간회 회원이 9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 조선공산당원으로 신간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회원은 상당수에 달했다(《高等警察要史》, 49쪽).

19) 1928년 6월 9일 신간회의 핵심 인사인 安在鴻이 〈濟南事件의 壁上觀(一)－田中內閣의 大冒險〉이라는 사설로 일제의 중국침략을 비판하자, 일제는 안재홍을 투옥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133일간의 장기 정간 처분을 하였다.

20) 복대표대회에 관한 글은 복대표대회 자료인 〈新幹會綱領及規約〉을 발굴·분석한 이균영의 것이 유익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제3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초로 複代表案을 제기하였다. 본래 신간회는 각 지회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하며 그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과 임원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기대회가 금지당하자, 인접한 몇몇 지회가 합동으로 複代表 1인을 선출하고, 이들 복대표들의 회의로 정기대회를 대신하려는 안이 바로 복대표회 안이었다.

1929년 4월 11일 열린 경성지회대회 임시간사회에서는 중앙간부 개선 건, 규약개정 건, 지회연합회 축성 건 등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전국을 14개 선거구로 정하고(전국 12개 도 및 일본과 경성지회), 각 선거구에서 2인의 중앙간부선거위원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중앙 간부를 개선하고 규약개정위원 역할까지 일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²¹⁾ 신간회본부는 경성지회의 복대표회안을 전격 수용하고, 일제 당국으로부터도 허가를 받았다.

1929년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복대표대회 일자가 정해지자, 신간회본부에서는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구획한 후 회원수에 비례하여 다시 각 구역을 소구역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소구역 대표수는 경북 6명, 경남·함북 각 4명, 전남·함남 각 3명, 경성·전북·평남·평북·일본 각 2명, 경기·강원·충남·충북 각 1명씩 총 34명으로 결정되었다. 복대표들의 임무는 본부에 모여 대표와 간부를 선거하고 규약개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대표 선출과정을 통해 복대표로 선출된 인원 중 복대표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표 1>에서 보듯이 총 27인이었다.

1929년 6월 28일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복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첫날 임시집행부 선거에서는 의장 허헌, 서기장 백용희, 서기 이주연, 사찰 안철수·방치규가 선임되었다. 임시집행부 구성후 진행된 규약개정은 이튿날인 29일 오전까지 심의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대표대회의 <新幹會綱領及規約>이었다. 이 복대표대회의 규약은 창립시 그것과 비교할 때,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과 각 지회에서 요구한 주장들을 대거 수용한 것이었다.

21)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

〈표 1〉

복대표 구역과 선출 대표

복대표구	구성지회	복대표	복대표구	구성지회	복대표
영일구		趙致基	홍성구		金淵鎭
김천구	김천 상주 선산 칠곡 고령 등 6개 지회	申相泰	청진구	어주 주을 경성 나남 청진 웅기	林瑞鳳
양산구	마산 밀양 양산	黃尙奎	경성구		許 憲
부산구		朴文熹	단천구	단천 북청 이원	李周淵
송정구	함평 장성 송정 나주	金時中	곽산구	의주 박천 용천 곽산	未 定*
청주구		安喆洙	진남포구		金重漢
경서구		徐世忠	대구구	대구 청도 하양 신녕 등	金善基*
해주구		崔承翼	영주구		權泰錄
함흥구	신포 정평 홍원 함흥 등	朴應七 (方致規)	마산구	마산 함안 창원 고성 통영 거제	呂 海
길주구	길주 명천 성진 등	孫永極	전주구	전주 임실 남원 순창 등	白庸熙
선천구		吳鉉竣*	목포구	장흥 강진 완도 목포	張炳俊
양양구	원주 양양 강릉 삼척 고성 양구 伊川	金炳煥	수원구	인천 강화 경주 수원 안성	孔錫政
봉화구		權景燮	평양구	평양 안주	崔允鈺
안동구		李世寧	회령구	부령 회령 온성	朴 泉
진주구	합천 함양 거창 사천 하동 진주	金辰煥	원산구		未 定*
정읍구		林裁淳*	대판구		未 定*
광주구		丁洙泰	동경구		金東訓*

비고 : ‘*’ 표시는 불참. 괄호 안 인명은 대신 참석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77개조로 구성된 규약 중 18개조가 분회와 지회에 대한 것이며, 특히 분회조에는 직업별·지역별 班 조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반조직은 이미 1927년 말~1928년 초 지회 활동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신간회운동의 내재적 흐름이었다.

둘째, 인접 지회 혹은 같은 도내 지회끼리 의결기관을 구성하여 일정부분

본부의 지시를 배제하고 독자성이 보장된 도 연합회 설치가 규정되었다.²²⁾

셋째, 지회의 대표 선출권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평균 회원 30명당 1명의 대표회원을 선출하였던 반면, 분회의 경우 회원 5명에 1인의 대표선출권이 부여되는 등 대표선출권에서 지회의 발언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넷째, 기존의 회장·간사제가 이전부터 각 지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오던 위원장·위원제로 개정되었다. 이는 당시 회장·간사제도가 봉건적·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자주 비판된 반면에 위원장·위원제는 당시 풍미하였던 ‘무산단체’의 일반적 제도로 인정되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때의 규약개정에서도 강령의 개정 및 개인가맹제를 대신하는 단체가입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²³⁾

(2) 복대표대회 선출 간부진의 성격

복대표대회의 간부진의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14개 구역 중 복대표가 불참한 일본과 평북, 경성지회를 제외한 11개 구역에서 銓衡委員을 1명씩 선출하였다.²⁴⁾ 이들 11명의 전형위원들은 전국 회원수를 감안하여 56명의 중앙집행위원과 13명의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였고, 중앙집행위원 후보 8명은 이에 앞서 선출되었던 허헌 위원장이 선임하였다.²⁵⁾

22) 이는 지방지회의 활성화와 제도화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3) 단체가입제는 신간회 창립기부터 주로 사회주의세력에서 주장되었던 것으로 신간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단체가입제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복대표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이들의 신간회내 활동의미 등이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24) 11명의 전형위원은 경기 공식정, 충북 안철수, 충남 김연진, 경북 권태록, 경남 황상규, 전북 백용희, 전남 장병준, 황해 최승익, 평남 최윤옥, 함북 임서봉, 함남 방치규였다.

25) 중앙집행위원: 홍명희·김항규·공식정·임서봉·안철수·김연진·김명동·조치기·권경섭·황상규·백용희·임재순·여해·손영극·방치규·최승익·김중한·김동훈·박문희·이주연·김병환·金炳魯·鄭在達·鄭鍾鳴·金翰·李濯鎔·趙東赫·李春塾·韓相駿·朴一陽·李基錫·黃義準·李春壽·申周極·全赫·

개선 간부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창립 당시 간부진이 거의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개선된 간부진 78명 중 창립시의 간부는 金明東·李灌鎔·朴熙道·洪命熹·權東鎭 등 5명에 불과했다. 복대표대회로 새롭게 재편된 개선 간부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즉 78명의 간부 중 사회주의자로 신상이 확인되는 인물은 38명으로 전체의 40%를 상회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화요회·서울청년회·ML계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당면임무로 삼고 있었고, 그 방편으로 신간회 회원들을 재건운동에 적극 끌어들이었다. 화요회계는 모스크바의 東方努力者共產大學 출신들이 귀국하여 벌인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신간회본부의 간부진에 가장 현저한 조직적 진출을 보였다. 그러나 신간회의 지방조직이나 노동자·농민층에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청년회계 재건운동이 보인 신간회에 대한 전략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고 그 때문에 각 지회에 많은 서울청년회계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서울청년회계가 집중한 곳은 함경북도와 전라도 지역이었다. ML계 역시 신간회 회원을 재건운동의 요원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었던 ML계는 지방세력을 구축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지회 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복대표나 본부 간부진에는 ML계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복대표대회로 새롭게 탄생한 허헌집행위원장체제는²⁶⁾ 이전에 비해 활발한

金東鮮·孫角·崔鍾涉·黃渭顯·金昌容·全一·李圖遠·金道欽·蔡奎恒·韓炳洛·李東壽·崔衡植·曹晚植·崔芝薰·李相求·尹赫濟·李龍吉·高成昌·李雲鎬·全景錫·金長煥, 중앙집행위원 후보: 趙炳玉·朴熙道·朱翼·金東弼·李會昇·羅承奎·裴鍾哲·裴德秀, 중앙감사위원: 위원장 權東鎭, 상무 趙憲泳·李恒發, 郭尙勳·林鍾萬·尹吉鉉·鄭建和·全濤·尹秉球·崔建·최윤옥·신상태·이시완.

26) 1929년 7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중앙상무집행위원: 홍명희·김항규·박문희·金東鮮·이주연·안철수·임서봉·김명동·이춘숙·조치기·한상준, 서무부장: 황상규, 부원: 이주연·金世振, 재무부장: 金炳魯, 부원: 김동선, 조직부장: 김항규, 부원: 임서봉, 선전부장: 李鍾麟, 부원: 조치기·안철수, 조사부장: 이춘숙, 부원: 이주연, 교육부장: 조병옥, 부원: 박문희, 출판부장: 박희도, 부원: 안철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중에서도 甲山火田民事件 真相報告演說會,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신간회의 관여와 그것을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했던 민중대회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민중대회는 광주학생운동을 민족적·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신간회 간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즉 북대표대회 이후 신임 중앙간부들은 이전의 침체된 활동을 실천적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많은 시도를 하였다. 민중대회사건은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중대회는 반드시 신간회운동만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언론·주요 사회단체의 연합형태로 구성·계획되었기 때문이다. 민중대회는 사전에 관계자들이 일제에 피체되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신간회 본부와 각 지회는 청년총동맹·근우회와 더불어 1930년 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후 1930년 金炳魯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신간회는 온건화노선을 지향하였고, 이는 신간회의 해소론이 제기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4) 지회의 설립과 활동

(1) 지회의 설립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창립된 후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청년·사상·노동·농민단체 등은 신간회에 대해 지지·후원을 표명하거나 신간회 창립을 위해 자진 해체 또는 통합하였다.²⁷⁾ 신간회의 지회 설립은 이러한 각 지방 단체들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세를 바탕으로 신간회의 지회조직은 10개월 후인 1927년 12월 27일 지회 100개

27) 이들 각 지방 부문단체들이 신간회를 지지·후원하는 가장 큰 까닭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상단체의 해체, 각 단체 사이의 파벌 해소를 통한 전선 통일 등이었다. 1927년 2월부터 6월까지 신간회에 대해 지지·후원을 표명한 단체는 京城仁旺青年會·고성청년회·상주청년회·영흥청년회·전북청년연합회·평양청년동맹·하동청년회·호남4단체연합간담회·함남 靈武青年會·함평청년연합회 등 외에도 상당수였다(이균영, 앞의 책, 230~231쪽 참조).

돌과 기념식을 치를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²⁸⁾

신간회지회는 1927년 12월 말까지 104개, 1928년 2월 15일까지 123개, 1929년 2월 15일까지 144개에 달하였고, 1929년 11월 현재 127개였으며,²⁹⁾ 해소 당시의 지회수는 124~126개에 달하는 등 신간회 지회는 거의 전국으로 확산·조직되었다. 이러한 지회 설립상황을 연도별·지역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한편, 신간회지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5월부터였다. 그리고 1927년 12월에는 17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가장 높은 지회 조직율을 나타냈다. 또한 1927년 6월부터 1928년 3월까지는 매달 5~17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신간회지회 설립이 가장 조밀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1928년 4월을 기점으로 신간회의 지회설립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지회설립이 급감한 이유는 1928년 2월부터 8월까지 계속된 일련의 조선공산당 검거사건과 그에 따른 日警의 강력한 탄압, 그리고 지회 설립요건을 갖춘 지역들이 1928년 3월 이전 대부분 지회를 결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8) 신간회 지회의 활동과 조직문제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한 지역의 지회를 중심으로 논점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균영은 신간회 지회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지회 연구의 지평을 개척하였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돌베개, 1996).

水野直樹, 〈新幹會 東京支會の活動について〉(《朝鮮史叢》 1호, 1979).

강정숙, 〈일제하 안동지방의 농민운동에 관한 일연구〉(《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신용희, 〈신간회 지회활동에 관한 연구—조선일보 기사분석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준식, 《농촌사회 변동과 농민운동—일제침략 함경남도의 경우》(민영사, 1993).

李均永,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강재순, 〈신간회 부산지회와 지역사회운동〉(《지역과 역사》 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

29) 1929년 6월 複代表大會 결과 성립된 許憲 중앙집행위원장 시기에 문제지회 20여 개가 정리된 결과 1929년 11월 현재 지회수는 127개가 되었다.

〈표 2〉 신간회지회 연도별 설립 상황

연도 지역	1927	1928	1929	1931	설립 불명	계	기 타
강원	원주 양양 강릉	고성 삼척			양구 춘천	7	伊川 철원
경기	경성 개성 광주 수원 안성 인천	京西 강화	京東 長湖	廣興	용인 양주	13	
경남	사천 마산 부산 거창 고성 진주 창원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밀양 삼천포 거제도	김해 울산 통영 동래 양산	기장 의령			21	창녕
경북	김천 포항 칠곡 봉화 안동 영양 영주 고령 대구 상주 영덕 예천 선산 울진 영천	군위 영해 경주 하양 경산				20	문경 청도 청송 풍천
전남	함평 구례 목포 벌교 장흥 영암 완도 나주 광주 장성 강진	순천 담양 송정 영광	광양		제주	17	고흥 綾州 兵營 右水 營
전북	정읍 전주 군산 임실 禾湖 김제 남원	순창 부안			옥구	10	익산
충남	홍성 공주 예산 당진	서산 천안			부여	7	강경 대전 논산
충북	괴산 음성 청주	진천 충주				5	영동
평남	안주 진남포 평양					3	개천 중화 평원
평북	선천 꾀산 용천	철산 박천 의주 신의주			龜城	8	
함남	북천 원산 함흥 문천 단천 홍원 덕원 정평 영흥 안변		이원		신포	12	신흥
함북	나남 길주 회령 성진 주을 명천 온성 청진 漁州	웅기	청암		경성	12	신아산 종성
황해	웅진 해주 재령 연백 장연	南川 황주 金川 白川 사리원				10	
일본	東京 京都 大阪		名古屋			4	
중국						0	용정 연변
계	96	34	8	1	10	149	24

비고 : 기타항목은 지회설립을 신청하여 본부로부터 승인받았거나,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척되었거나, 설립대회가 일시 금지된 경우로서 그후 설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활동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신간회의 지회설립과정은 대개 각 지역에 신간회설립준비위원회나 신간회 발기위원회 등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활동에 의해 30명 이상의 회원이 모집되면 신간회본부에 지회설립을 신청하였고, 이를 본부가 승인하면 설립대회 개최일자를 확정하였다. 설립준비위원회나 발기위원회는 대부분 그 지방에 존재하던 각 부문단체들의 지지나 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경우와 각 단체들 중 하나 혹은 단체간 연합에 의해 조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영광·마산·김해·고성·함흥·북청·원산·동래·장성·김제·단천지회 등이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연합·구성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신간회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서 청년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 등 각 부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을 뜻하며, 그 중심역할은 청년단체가 주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廣州의 송파청년회·장성청년연맹·순창청년회·합천청년회·괴산청년회·남원청년동맹 등을 들 수 있다.³⁰⁾

한편, 지회설립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한 것은 지방신문기자들이었다. 때문에 신간회지회설립준비위원회가 《조선일보》·《동아일보》·《中外日報》의 지국 사무실에서 개최되거나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광양·영광·마산·목포·합천·김천·포항·칠곡·대구·청주·固城 등 24개 지회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며, 설립이 이루어졌던 149개 지회 중 16%에 이르는 비율이었다. 또한 신간회지회에서 지국장을 포함한 지방신문기자들의 비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복대표의 구성이었다. 각 지회에서 핵심세력으로 역할한 이들 복대표 32명 중 지방의 신문지국장이나 기자가 孔錫政·徐世忠·孫永極·安喆洙·呂海·林載淳·丁洙泰·趙致基·崔允鉦 등 9명이었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것은 지회에서 신문기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신간회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간회지회의 설립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경은 신간회지회

30)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120쪽.

설립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탄압하였다. 거제도 · 울산 · 白川 · 통영 · 김해 · 양산의 경우는 설립대회를 금지당한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 끝에 지회를 설립하였으나, 익산 · 논산 · 양주 등은 경찰의 탄압으로 지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특히 1930년에는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회를 설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탄압은 극심하였다.³¹⁾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간회지회는 거의 15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건설하였다. 그 회원수는 창립 1주년이 되는 1928년 2월 15일 현재 2만여 명이었으며, 1929년 3만여 명, 1931년 5월 해산 당시에는 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신간회에 거는 민족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2) 지회의 성격과 활동

가. 지회의 조직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간회의 지회 조직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부 차원에서는 1년이 경과하도록 신간회 강령에 명시된 이른바 ‘비타협적 정치투쟁’ 지침이나 활동을 전혀 전개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는 일제가 정기대회를 단 한 차례도 허가하지 않을 정도의 강한 탄압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간회 본부의 임원진으로 주로 온건적 민족주의 계열 인사가 포진한 것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신간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그 활동은 기존 사회단체들의 운동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물론 신간회가 비타협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였지만, 비타협운동의 방법 등을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신간회지회에서 전개한 활동 중 순회강연회, 노동야학, 교양강좌 등은 이미 이전부터 전개된 사회운동이었으며, 소작분구 조사, 東洋拓植柱式會社에 대한 저항, 土地改良會社의 폐지운동, 조선인 본위의 교육 요구, 관리 · 경찰의 부정 · 불의에 대한 조사 · 경고 등도 그러하였다. 때에 따라 언론 · 집회 ·

31) 이러한 지역은 경원의 新阿山 · 价川 · 청송 · 영동 · 新興 · 철원 · 종성 · 대전 등이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파업권의 요구 등은 정치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서 신간회는 뚜렷한 행동지침이 없었다. 따라서 신간회의 실질적 활동공간인 지방의 각 지회에서는 젊고 활동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깊숙이 논의했으며, 핵심은 신간회의 ‘조직문제’로 모아졌다.

1927년 상반기까지 신간회를 民族單一黨으로 인식하던 각 지회에서는³²⁾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신간회를 민족단일당과 구별되는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³³⁾ 그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조선일보》, 1927년 8월 7일자에 실린 〈민족단일당의 문제〉라는 사설이다. 이와 같이 신간회 창립 직후부터 조직형태를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로 인식한 것은 조선공산당뿐만 아니라 서울청년회 계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간회가 전국적인 조직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우회선언에서 제기한 ‘전민족적인 정치투쟁’을 실천하지 못하자, 조선공산당은 “표명해야 할 선언이나 테제·행동강령 등에 의해 명백한 규정 및 선언할 내용을 보류”하고 있는 신간회의 조직형태를 재차 규정하였다.³⁴⁾ 그 결과 1927년 10월경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안광천에 의해 신간회에 대한 인식은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에서 ‘민족협동전선당의 매개형태’로 바뀌었다.³⁵⁾ 이는 신간회를 당적 조직과 협동전선으로 구별지으려는 인식이었다. 이렇듯 신간회의 조직형태에 대한 재규정과 논의가 제기된 것은 清算論에 대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지회 설립으로 인한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활동이 없는 신간회에 단계별 활동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⁶⁾

32) 《조선일보》 사설이나 시평에 보면 ‘민족단일당’ 외에도 ‘좌익민족단일전선’, ‘좌익민족전선’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었다.

33) 《朝鮮日報》, 1927년 9월 16일.

34) 《朝鮮日報》, 1927년 12월 10일, 사설 〈新幹會의 京城大會〉.

35) 盧正煥, 〈新幹會와 그에 대한 任務〉(《朝鮮之光》 73, 1927년 11월호).

36) 신간회의 조직형태에 대해 조선공산당이 저지른 오류에 대해 韓偉健은 4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신간회의 조직형태에 대한 불확실한 견해로 인해 ‘정당적 형태의 협동전선’을 결성하려 한 점, 둘째 이론적으로 노동계급이 이끄는 협동전선을 조직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포섭과 동원과정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셋째 조직과정 자체를 투쟁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선

이러한 비판은 신간회의 조직과 인식체계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간회 조직이 중앙집권적 형태로 구성된 까닭에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여 전투조직이 수반되지 못했고, 투쟁강령에 따라 구체적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큰 결함은 당적조직형태였다.³⁷⁾

이와 같은 신간회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은 구체적 행동강령의 확립, 중앙집권제적 조직형태의 지회중심체로의 개편, 개인가입제의 단체가입제로의 전환 등을 구상하였다. 이에 앞서 신간회 각 지회에서도 1928년 2월의 1차 정기대회를 앞두고 정기대회에 제출할 정책안들을 결의하였다. 그것은 대개 ① 회장제에서 집행위원장제로의 변경, ② 지방(도)지회 연합기관의 설치, ③ 행동강령 제정, ④ 기관지 발간, ⑤ 단체가입제 실현 등이었다. 이 중 기관지 건을 제외한 4가지 안건은 모두 신간회의 조직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신간회가 실천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부분 지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체 변경안들은 대개 중앙본부에 대한 지회의 자율권 확대가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바로 신간회를 아래로부터의 조직형태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체가입제는 ‘조직문제’에 관한 논의의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해소시까지도 해소 찬반론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쟁점이었다.³⁸⁾ 이에 따라 1927년 말에서 1928년 초에 이러한 문제는 각 지회와 사회운동자들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조선공산당은 최소한 1927년 10월경 종래 규정한 신간회의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를 ‘민족협동전선당의 매개형태’로 변경·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신간회에 단체가입제를 실현시킬 것을 계획하였지만 1928년 2월의 검거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조직문제’에 관해서는 코민테른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6회

조직 후투쟁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꼽고 있다.

37) 鐵 岳, 〈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の結成と新幹會及び獨立促成會の任務〉(《朝鮮前衛黨當面の問題》, 東京: 左翼書房, 1930), 93~94쪽.

38) 신간회는 정당적 조직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전투적인 조직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단체가입제가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코민테른대회(1928. 7. 17~9. 10)에서 채택된 〈식민지·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 혁명운동에 관한 테제〉 중 조선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신간회의 정당적 조직형태를 부정하고 ‘협의체적 공동전선’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신간회를 ‘민족협동전선의 매개형태’로 또다시 규정하였다. 이렇듯 신간회의 조직형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지회와 조선공산당 그리고 코민테른에서 각각 일어났다.³⁹⁾

나. 사회적·정치적 정책과 활동

신간회 각 지회의 정책과 활동은 크게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범주의 활동은 크게 ① 계몽운동, ② 생활·생존권 수호운동, ③ 반봉건운동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계몽운동의 가장 주된 형태는 웅변대회와 연설회 개최 및 야학의 운영이었다. 연설회의 주제는 신간회의 선전과 신간회를 통한 민족 결집의 달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웅변대회의 주제는 미신 타파, 黑衣 착용, 조혼금지, 斷煙과 아편 추방, 매춘과 풍기문제 등으로 주로 계몽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리고 야학의 교사나 경영자로서의 참여나 야학을 지회에서 직접 경영함으로써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둘째,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은 민중의 더 나은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계층·계급으로부터 생존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투쟁운동이었다. 생활수호운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비조합의 설치였다.⁴⁰⁾ 또한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에 기반한 지회들은 주로 借家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차가료 인하운동 전개, 차가인동맹 조직, 차가인 보호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생존권수호운동은 대부분 농민운동·노동운동 및 사상운동·신간회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성격은 반제운동적인 것으로서 일제의 통치정책 철폐와 수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개되

39) 이균영, 앞의 책, 270~286쪽.

40) 소비조합 설치를 결의한 지회는 順天·영암·청주·경동·평양·진남포·곽산 지회 등이었으며, 양산지회는 협동조합 설치를 결의하였다(이균영, 위의 책, 289쪽).

었다. 따라서 그 전개양상은 토지개량조합 철폐, 戶稅 인하, 수리조합 횡포 타파, 수리조합 설치 반대, 酷稅 폐지,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 노동조건과 노동임금에서 민족적 차별 철폐, 각 부 농회 반대, 조선인 착취기관의 폐지, 최저임금제 확립 같은 요구가 대중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제적 성격을 띤 요구는 일제의 정치 정책의 전환없이 실현불가능한 문제였다.

셋째, 반봉건운동은 당시 조선의 현실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은 보편적으로 봉건적 질서가 널리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존권운동과 농민운동에서 드러나는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노동 착취, 지주의 소작권 임의변동, 수확의 최고 80%에 이르는 소작료 따위 등 현존하는 봉건적 잔재가 일반적 양상으로 엄존해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농민적 소유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농촌사회에서 일어나는 농업문제는 필연적으로 반봉건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⁴¹⁾

이러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전개된 정치적 활동은 일제하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사실상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간회 각 지회의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안건은 정치문제·경제문제·사회문제가 보편적이었다. 이때 정치문제로 포함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에 대한 요구들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요구, 각종 억압 법률의 철폐, 단결권·파업권 보장 같은 것들이었다. 이것은 결국 민족문제까지 포괄하는 성격의 것이었다.⁴²⁾ 그러나 실제 이 정책안들은 그 지회의 구체적 실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신간회가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노동·여성·학생·소년·형평운동 등 모든 부문운동세력을 지도·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이러한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던 신간회 관계자들이었기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간회지회의 활동은 사회적 활동에 집중되었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41) 이균영, 위의 책, 287~293쪽.

42) 수원·대구·연백지회에서는 조선민족억압법령, 制令과 保安法 철폐 등을 논의·요구하였으며, 그 외 각 지회에서도 단결권·파업권 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소년·부인의 야간노동, 경내노동 금지, 조선인 차별문제, 군대 주둔 반대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전개하였다.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신간회 창립 이전부터 각종 부문운동들이 전개해왔던 활동들이었으므로 ‘정치적 투쟁’을 목표로 했던 신간회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5) 신간회의 해소

(1) 신간회 해소론

192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세력은 민족주의세력이 개량화되어 간다고 평가하면서 민족주의 고립화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세력은 민족주의세력과 상층연합에 근거한 정당형태의 통일전선방침을 폐기하고 대중투쟁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운동을 모색하였다. 이는 당면투쟁을 위한 임시적인 대중단체협의회 혹은 반제동맹 결성을 통한 하층 통일전선운동을 뜻하는 것이었다.⁴³⁾ 이러한 변화는 주로 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의 영향이었다.⁴⁴⁾ <12월테제>에서는 식민지문제에서의 반제연합전선론의 의의가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9월테제>에서는 신간회를 개량주의단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후반기부터 1930년까지는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소문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ML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이론가로 알려진 한위건은 1929년 12월 1일 天津에서 발간된 《理論鬭爭》에 기고한 논설

43) 金明久, <코민테른의 對韓政策과 新幹會 1927~1931> (《新幹會研究》, 동녘, 1983).

신주백, <1930년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개과정> (《역사와 현실》 2, 1989).

이애숙,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진영의 전술 전환과 신간회 해소문제> (《역사와 현실》 11, 1994).

44) 朴慶植, <조선민족해방운동과 민족통일전선> (《新幹會研究》, 동녘, 1983).

金明久, 앞의 글.

水野直樹,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론과 신간회운동> (《역사비평》 2, 1988).

禹東秀, <1920년대말~30년대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신국가건설론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72, 1991).

林京錫,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大同文化研究》 27, 1992).

을 통하여 신간회에 대하여, “현재 조선의 공산주의운동 진영에서는 즉시해론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등 신간회가 많은 결함을 띤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의 조직역량이 대단히 미약한 현재 대중적 · 전투적 협동전선의 결성을 위해서 노동자 · 농민의 대중적 · 정치적 동원을 위해서, 또 지역적으로 합법적 대중조직의 협동통일을 위해서 당면에 있어서는 유력한 투쟁기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한위건은 신간회가 ‘어느 정도까지 매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한위건의 입장은 이후 ML계 高景欽의 글을 통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고경흠은 “현 조선의 민족부르주아지는 <12월테제>에 명시된 대로 결코 제국주의 통치에 대해서도, 봉건적 유제에 대해서도 유력한 투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가장 나은 경우에도 그들은 제국주의자에 대한 단지 개량주의적 반대파를 구상하는 데 머물 따름이다. 이 민족부르주아지의 혁명성 해소가 현 조선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를 맹주로 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인식 아래 고경흠은 신간회 지도부는 소부르주아정치가들이며 그들이 바로 “자치주의 투사들”⁴⁷⁾이라고 규정하여 이후 신간회 해소론의 논리적 필연성을 제고하였다.

서울-상해계의 李雲赫은 “공산당은 신간회 · 천도교 · 형평사 등에 전위분자를 잠입시켜, 대중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 속에 들어 있는 대중들을 끌어내어 무산계급단체나 민족적 해방협동전선에 편입시키고 그 단체들은 해소해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⁴⁸⁾ 그는 신간회 해소 후 협동전선은 “공산당이 제시한 당면의 반제 · 반봉건 슬로건을 행동강령으로 아래로부터의 대중참가에 의한, 신간회와 같은 단체의 내부에서가 아닌, 밖으로부터의 ‘노동운동협의회’ · ‘농민운동협의회’ · ‘청년운동협의회’ 등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신간회를 해소시켜 대중들을 새로운 협의체적 협

45) 鐵 岳, 〈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の結成と新幹會及び獨立促成會の任務〉(《朝鮮前衛黨當面の問題》, 左翼書房, 1930), 92~93쪽.

46) インタナショナル編輯部 編譯, 《朝鮮問題》(전기사관, 1930년 4월 18일 발행), 8쪽.

47) 위의 책, 20~21쪽.

48) 姜德相 · 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19, 314쪽.

동전선의 구성단체들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세력이 통일전선전술이 달라지면서⁴⁹⁾ 중국관내·만주에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준비조직은 해체되거나 민족주의자만의 단체로 개편되었다.⁵⁰⁾

(2) 신간회지회의 해소운동

신간회는 북대표대회 결과, 許憲집행부가 구성됨으로써 1928년 2월 이후부터 침체되어 왔던 신간회운동이 큰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甲山火田民事件을 비롯한 여러 활동은 일제에 의해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전개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들의 혁명운동이었지만 그 발생과 전개에는 신간회 및 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신간회본부와 경성지회 간부들은 광주학생운동을 민족적·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른바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1929년 12월 13일로 계획된 민중대회는 사전에 발각되어 44명의 신간회 회원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신간회 지회를 중심으로 조선청년총동맹·근우회 등이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는 큰 타격을 받았다. 관련 간부들의 구속 외에도 지회의 많은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에서 신간회의 위상은 상승하였다. 1929년말 약 3만 7,000명이던 회원이 1930년 11월에는 3만 9,257명으로 증가한 상황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민중대회’사건은 검거 이후 남은 신간회 본부 지도자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이 구성된 신간회 집행부는 ‘온건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재정부장겸 회계인 김병로가 1930년 1월 서무부장과 조사부장을

49) <12월테제>에 의해 조선공산당이 해소된 직후 공산당 재건운동 이론자들 중에서도 韓偉健과 같이 신간회가 “어느 정도 매개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거나, 林元根같이 신간회가 완전히 소부르주아지로 구성된 단체는 아니며 노동대중의 투쟁력을 말할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소반대론을 펴는 경우도 있었다.

50) 金喜坤, 《中國關內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지식산업사, 1995).

盧景彩, 《韓國獨立黨研究》(신서원, 1996).

검직하게 됨으로써 신집행부는 사실상 김병로 집행위원장 대리체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일제에 의하여 파악된 김병로는 “종래의 신간회운동은 다만 관현과 항쟁 대립하여 그 억압을 받아 하등 조선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것이 없음을 거울삼아 스스로 반성”⁵¹⁾하고, “종래 운동방침을 개혁하여 중앙간부를 데리고 천도교 최린 일파가 주장하는 자치운동과 협력하여 합법운동을 주장”⁵²⁾하게 되었다. 김병로 체제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신간회본부의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김병로 체제의 신간회 정책은 우경화 혹은 온건화정책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신간회본부의 온건화경향에 대한 반발은 경성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성지회는 신간회 창립 당시 강령에 명시한 “타협주의를 배격한다”는 사실을 들어 신간회의 존립근거와 목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박문희 사건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간회본부측은 자파 중심으로 중앙조직을 정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간회본부는 1930년 9월 중으로 전국대회를 대신한 북대표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신간회본부는 다시 11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것으로 전체대회를 대신하려 하였다. 대회 첫날인 11월 9일 온건파인 본부측은 합법운동단체들과 천도교 신파를 비롯한 자치운동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가입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경성지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또한 대회에서 50명의 간부가 선출되었는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온건화노선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⁵³⁾

51) 京畿道警察部, 《治安狀況》(1931), 7·35쪽.

52) 京畿道警察部, 《治安狀況》(1931), 13쪽.

53) 이 대회에서 선임된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중앙집행위원장: 金炳魯

중앙집행위원: 金湖(하동)·沈相玟(김천)·金昌容(나주)·金哲(金川)·朴源植(신의주)·具然達(청주)·李漢鳳(강릉)·崔相稷(해주)·姜基德(원산)·金昌權(청진)·宋斗煥(대구)·金時中(장성)·李廷鴻(순창)·宋秉赫(당진)·李德用(괴산)·李東壽(원주)·金元湖(재령)·金商圭(목포)·尹柱(합흥)·朱垞熙(주을)·宋洙格(정읍)·金士翼(북청)·朴台弘(진주)·申尙泰(칠곡)·黃尙奎(밀양)·尹秉球(주을)·李寬求(경성)·韓炳洛(정평)·郭尙勳(인천)·崔允鉦(평양)·金恒俊(신의주)·金

대회 직후인 11월 19일 신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위원과 각 부서책임자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상무집행위원 : 李恒發 · 李寬求 · 徐廷禧 · 白寬洙 · 韓炳洛

회계검 재정부장 : 金容起

서기검 서무부장 : 金恒圭

조직부장 : 徐廷禧

조사부장 : 李恒發

출판부장 : 白寬洙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 선출 간부들 중 사회주의자들인 이항발 · 박문희 · 이주연 · 한병락 · 서정희 등이 신간회의 온건화노선을 주도하였다. 대체로 이들은 서울청년회 계열의 인물들이었고, 이항발의 영향하에 있었다. 대체로 김병로 집행위원장 시기의 간부진은 前 신간회 간부, 물산장려회와 조선민흥회 간부, 그리고 조선청년총동맹내의 온건파, 서울청년회계가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⁵⁴⁾

신간회 경성지회는 1930년 12월 17일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전체대회 대행중앙집행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성지회는 그 결의문을 더 구체화시킨 이른바 〈通議文〉을 작성하여 전국 지회에 발송하였다.⁵⁵⁾ 그것은 본부의 온건화운동으로서의 노선 전환을 공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경성지회의 본부

容起(경성) · 白寬洙(경성) · 朴文熹(동래) · 李正(진남포) · 李周淵(단천) · 金恒圭(경성) · 姜相熙(경성) · 李恒發(경성) · 徐廷禧(경성)

중앙집행위원 후보 : 변희용 · 강인수 · 조영국 · 노석정 · 김귀동

검사위원장 : 양봉근

검사위원 : 유진태(경성) · 현동원 · 노백용(김해) · 박의양

(괄호 안 지역은 출신지가 아닌 지회임. 이균영, 앞의 책, 389쪽에서 재인용).

54) 이균영, 위의 책, 395쪽.

55) 《조선일보》, 1930년 12월 27일.

에 대한 이러한 반발은 결코 신간회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30년 12월 30일 경성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신간회 해소운동에 반대성명 발표를 결정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신간회본부의 온건화노선은 이후 신간회 지회에서 해소운동이 전개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신간회본부와 경성지회간의 갈등은 전국 각 지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다.⁵⁶⁾ 원산 · 이원 · 통영 · 평양 · 길주 · 성진 · 부산지회⁵⁷⁾ 등은 해소론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전체대회대행중앙집행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위원회의 결과로 신간회는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영도하”에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해소론을 논의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회가 본부의 온건화노선이나 전체대회대행중앙집행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⁵⁸⁾

해소론자들은 “해소는 한 조직체의 해산을 뜻하는 해체와는 달리 한 운동에서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전환하는 변증법적 자기발전을 뜻하는 것”이라 하면서, 신간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소론자들의 주장은 ① 신간회 지도부가 타협주의 노선으로 전환된 점,⁵⁹⁾ ② 신간회의 조직형태가 정당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⁶⁰⁾ ③ 신간회의 강령이 추상적이며 구체적 운동지침이 없다는 점,⁶¹⁾ ④ 객관적 정세변화에 따라 주체적 조종조건이 변했다는 점 등이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객관적 정세변화란 세계공황이 일어나고 일본이 만주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며, 주체적 조종조건이란 이

56) 安城(《조선일보》, 1931년 1월 23일), 咸興(《동아일보》, 1931년 1월 13일), 密陽(《동아일보》, 1931년 1월 27일), 江陵(《조선일보》, 1931년 1월 27일) 지회는 지회 차원에서 직접 본부와 경성지회의 갈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산지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동아일보》, 1931년 1월 31일).

57) 신간회 해소론을 처음 제기한 것은 부산지회였다.

58) 이균영, 앞의 책, 397쪽.

59) 부산지회에서는 “본회의 근본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민족개량주의가 발호해 온” 때문이라고 하였다.

60) 단천지회에서는 “조직의 중요한 모순과 소부르주아적 지도로 인하여 하등의 적극적 투쟁도 못하고, 그 안의 노동대중의 투쟁의욕을 말살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계급적 대진출을 방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였다.

61) 평양지회에서는 “행동강령도 없는 신간회의 현재 강령만으로는 오히려 투쟁의식을 말살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무렵에 나타나는 노동대중의 전투화·혁명화 현상이 진전됨을 말하는 것이었다.

해소론을 주장하는 지회와 달리 원산·신의주·마산·함흥·밀양·양산 지회는 해소반대를 결의하였다.⁶²⁾ 이들은 지금은 해소시기가 아니라고 하거나(양산지회), 해소에는 찬성하지만 해소의 이론적 당위성보다는 노동·농민운동의 강화를 통해 그것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해소론은 관념적 해소론이라고 주장하였다(원산·함흥지회). 민족주의자 가운데 가장 선명한 해소반대론을 펼친 안재홍은 “조선과 같이 근대累세기에 그 민족의식이 침체 萎微하였던 인민은 그 자신이 민족적 정조의식에 浸潤되는, 양양되는 민족소부르주아적 혹은 자본주의적 의식인 관념운동의 과정조차 아직도 지속할 것을 역사적 과제로 가지고 있다. 하물며 조선의 운동은 양대 진영의 병렬합동이 가장 동지적 지속을 하여야 할 정도 하에 있고 둘이서 서로 대립 배격할 정세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⁶³⁾

안재홍은 해소론을 “공연히 남의 본을 받아 가지고 日本勞動黨 해소론에서 용어와 이론을 빌려온 直譯的 국제연장주의”라고 비난했다.⁶⁴⁾

신간회의 해소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정될 수 없었고 결국은 조직대결로 치달았다. 1931년 5월 15일,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신간회 제2회 전체대회가 열렸다. 1927년 신간회 창립대회 후 처음 열리는 전체대회이자 동시에 해소대회였다. 대회 첫날, 대회에 파견된 대의원 총수는 80명이었다. 대회 이틀째 방치규·최천·조열·김창윤·한홍정 5인을 전형위원으로 하는 임시집행부가 선임되었다. 의장 李晃, 부의장 한홍정, 서기장 尹基鼎, 서기 朴恭根·尹永均, 사찰 崔浩讚·金采龍·朴哲煥·金斗煥·玄益謙이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해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⁶⁵⁾ 이날 36명의 중앙간부진이 선임되었고⁶⁶⁾ 드디어 해소안이 제출되었다. 경찰

62) 이균영, 앞의 책, 518쪽.

63) 安在鴻, 〈해소하에게 與함〉(《批判》7·9합집, 1931), 32쪽.

64) 安在鴻, 〈解消論 冷眼觀—非國際延長主義〉(《조선일보》, 1930년 12월 26일, 사설).

65) 《조선일보》, 1931년 5월 17일.

의 제지로 찬반토의는 금지되었다. 경성지회 대의원인 김혁의 동의와 林和의 재청으로 거수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안이 가결되었다.⁶⁷⁾ 해소대회에서 해소론 쪽으로 분위기를 선동·유도한 것은 카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⁶⁸⁾ 해소파들은 해소의 변을 신간회의 조직적 결함을 극복한 다른 조직체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신간회 해소 결의 이후 모든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결국 신간회 해소는 해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安建鎬〉

66) 《조선일보》·《동아일보》, 1931년 5월 18일.

67) 《동아일보》, 1931년 5월 18일.

68) 《조선일보》, 1931년 10월 6일.

安漠, 〈朝鮮プロレタリア藝術運動史〉(朴慶植 編, 《朝鮮問題研究叢書》 7권, アシア問題研究所, 1982).